



SINCE 1949



국회보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2023. 06
VOL. 679

감사합니다.
호국영령께 소리 내어
인사드리고
마음 깊이 존경을
표합니다.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국회보

since 1949

2023. June
Vol. 679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3년 6월 1일

발행인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홍형선 위원장(사무차장)

박태형 위원(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위원(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위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위원(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수옥 위원(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위원(법제실장)

정지은 위원(문화소통기획관)

정환철 위원(공보기획관)

김형진 간사(공보담당관)

국회보편집실무위원회

한주연(보좌관), 윤희진(비서관), 이구형(서기관)

편집진

글 김현아(취재보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이팝 02)514-7567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5

04 지금 국회에서는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국회연설
- 대한민국 국회,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김진표 국회의장, 초당적 미 하원의원 방한단 접견
- 김영주 국회부의장,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공식 방문
- 정우택 국회부의장, 라오스·한 의원친선협회장 면담
- 국회사무처, '사랑의 PC 기증식' 개최

13 특집 - 전원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 및 앞으로의 과제

-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활동의 결산 _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 선거제도 관련 시민참여단 공론화 실시 결과 분석 _송기복 국회의장실 정책수석비서관
- 선거제도 개편 등 앞으로의 과제 _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2 위원장에게 듣는다 _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우주항공·인공지능(AI)·ICT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 선도"

24 길에서 길을 찾다 _문진석 의원

사통팔달의 고장 천안

28 의원의 좌우명 _서정숙 의원

'너희 중에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자신이 나서서 지도자가 되고 본이 되어라' (도산 안창호 선생)

30 칭찬합시다 _김태호 의원

이원욱 의원이 김태호 의원을 칭찬합니다

32 나의 인생 나의 정치 _신정훈 의원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꿈꾸다

34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쓰레기 소각장 문제, 소상공인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CONTENTS



22



24



28



30



32

- 43 국회의 풀꽃과 나무 이야기**
삼색조팝나무

- 44 함께하는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토론회

- 46 법률, 시대를 읽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으로 재외동포정책의 근간을 세우다
_조기열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48 주재관 리포트**
한미동맹 70주년 성과와 한미의회협력 강화 방안
_김경신 국회 워싱턴 주재관

- 50 이달의 청원**

- 52 위원회는 지금**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및
‘국회 MWC 2023’ 등 개최

- 56 국회 뉴스**

- 62 법 시행 그 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64 새 법률 소개**
국회 본회의, 법률안 113건 의결

- 70 만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72 4차산업혁명시대 살아가기**
인공지능의 르네상스가 왔다 _김동철 박사

- 74 국회 사람들**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최우선 목표”
_이임걸 국회경비대장

- 76 이달의 서평**
디지털 폭식 사회 _지용구 교수

- 78 고전에서 읽는 지혜**
조선의 대표적 인문지리서 ‘택리지(擇里志)’
_박석무 석좌교수

- 80 국회 미술관**
140년의 시간을 연결하는 한 컷의 이미지
_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

- 83 찰칵, 국민이 담은 국회**

- 84 속기록으로 본 의정소사**
에너지 절약은 모두 다함께! _오근순 속기사무관

- 86 산으로 떠나는 치유여행**
다량쉬오름 _유인근 여행칼럼니스트

- 90 생활 속 우리말글**
‘아’ 다르고 ‘어’ 다른 우리말 _김풍기 교수

- 92 정치 관련 주요 일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국회연설

김진표 국회의장, 트뤼도 캐나다 총리 접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5월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5월 17일 의장접견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접견하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5선 연방 하원의원인 만 51세의 트뤼도 총리는 2015년부터 총리직을 맡고 있다. 트뤼도 총리의 이번 방한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에 대한 답방으로,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이뤄졌다.

김 의장은 “한·캐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오늘 예정된 트뤼도 총리의 의회 연설은 2017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래 6년 만의 대면 연설이자 캐나다 총리로서는 14년 만의 국회 연설”이라며 “새로운 양국관계 60

년의 비전을 양국 국회와 국민에게 전달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우리 국회는 현재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의 채택을 추진(2023.5.9 발의)하고 있다”며 “캐나다 의회 차원에서도 수교 60주년 기념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양국 의회가 더욱 긴밀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자유로우며 참여가 활발한 정치적인 사회를 만들어내는 등 많은 것을 달성했다”며 “기후변화, 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5월 17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쟁, 인플레이션, 코로나 팬데믹 등 불확실성이 강한 이 시대는 강한 영감을 줄 수 있는 모델을 필요로 하는 만큼 양국 협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자원이 풍부하고 첨단 산업이 발달한 캐나다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양자 FTA를 체결(2015.1월 발효)한 한국은 상호 보완적인 최적의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라며 “우리 배터리 기업의 순조로운 대(對)캐나다 투자와 인공지능 분야 등으로의 투자 확대를 위한 트뤼도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에 “여러 측면에서 양국 경제가 상호보완적인 만큼 양국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트뤼도 총리, “안보협력으로 북태평양 안보 보장 및 경제교류 활성화”

환담 종료 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트뤼도 총리와 함께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트뤼도 총리의 연설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한이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새로운 미래를 향

해 전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뤼도 총리는 “평화·번영·지속가능성의 새로운 환갑 60년 사이클을 단순한 친구를 넘는 가장 절친한 친구로서 시작하자”고 제안하면서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 민주주의 가치 수호, 기후 및 에너지 위기에 대한 노력, 글로벌 국제정세에 대한 공동 대처,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등에 대해 20분 가량 연설했으며, 의원들은 10여 차례 이상 박수로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캐나다 측에서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프랑소와-필립 샴페인 혁신과학산업장관, 타마라 모히니 주한캐나다대사, 케이티 텔포드 총리비서실장, 조디 토마스 총리 국가안보정보보좌관, 조던 제드 총리 임시 외교국방정책자문, 벤 진 수석자문관, 바네사 헤이지-무사 공보부담당관, 오즈 융익 정책자문관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서영교 의원(한·캐 의원친선협회장), 김석기·양정숙 의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임웅순 주캐나다한국대사 등이 함께했다. 🍷

대한민국 국회,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김진표 국회의장, “글로벌 경제 전쟁의 최종 승자는 결국 벤처·스타트업 강국이 차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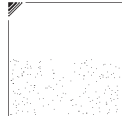
김진표 국회의장이 5월 10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 간담회가 5월 10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와 관련해 국회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 차원의 입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과학기술·경제전쟁에서 최종 승자는 결국 벤처·스타트업 강국이 차지할

것”이라며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만으로는 저성장의 늪을 헤쳐 나가기 어렵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민간의 모험자본이 벤처·스타트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용자’에서 ‘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대적인 금융혁신이 필요하다”며 “획기적인 벤처 육성전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창업천국’



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형주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은 ‘벤처산업 환경과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발제를 통해 벤처생태계 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회수지원, 민간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 벤처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제도 도입 등 정부의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불필요하고 장애가 되는 규제의 철폐, 기술특례상장제도 도입 등 회수시장 활성화, 모태펀드 예산 증액 등 정부재정 역할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원호 SV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는 ‘글로벌 K-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K-VC(벤처캐피탈)의 필요성’ 발제를 통해 “K-유니콘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VC들의 글로벌화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및 해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발언 및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애로사항과 입법·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철폐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했다.

“M&A 활성화와 기술·금융 아우르는 인재 양성 필요”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오찬을 함께 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현장의 목소리와 제언에 대해 김 의장은 배석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와 소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에게 입법방안 등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간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5월 10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M&A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투자은행은 인력의 60%가 엔지니어인 반면, 국내 대형 금융기관은 이공계 인력이 5% 미만으로, 글로벌 기술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금융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중·고등학교에서 여성들의 이공계 진출을 돕는 진로 교육 등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벤처회사가 나스닥에 직상장되도록 해외 투자회사를 연계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와 오찬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또 관련 부처 소관 위원회에서 고상근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진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함께 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 초당적 미 하원의원 방한단 접견

김 의장, “올해 안에 한미의원연맹 창설해 함께 일하자”



5월 1일 국회접견실에서 김진표 의장(앞줄 가운데)과 번 뷰캐넌 미 하원 민주주의의 파트너십 위원장 등 미국 하원의원 방한단이 손하트를 들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5월 1일 국회접견실에서 번 뷰캐넌 미 하원 민주주의의 파트너십 위원장(공화당)을 단장으로 하는 초당적 하원의원단을 접견하고 ‘한미의원연맹’ 및 ‘미한의원연맹’ 창설 등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 발전방안과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하원 민주주의의 파트너십(House Democracy Partnership, HDP)은 전세계 민주주의의 증

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3월 설립된 미 하원 내 초당적 위원회다.

김진표 의장은 먼저 “우리 정상의 국민 방미 직후인 중요한 시기에 초당적 미 하원의원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미 의회가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한미 양국은 70년간 한미동맹을 성공한 동맹으로 만들면서 서로 큰 도움을 받았



김진표 국회의장과 번 뷰캐넌 미 하원 민주주의의 파트너십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고, 특히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뷰캐넌 위원장이 적극 지지한 한미 FTA도 올해 새로운 10년을 열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교역은 약 70% 증가했고,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대미 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한미 FTA가 양국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뷰캐넌 위원장 “민주주의 분야에서 양국이 함께하면 더 나은 세계 만들 수 있을 것”

뷰캐넌 위원장은 “지난 70년간 한국이 이룩한 경제 발전은 기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한미 FTA의 경우에도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있었던 만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뷰캐넌 위원장은 이어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원 민주주의의 파트너십 위원회’는 전 세계 22개 국가와 파트너십을 맺고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 국회와도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HDP와 같이 한미 양국 정치인들이 공감하는 의제들에 관해 함께 힘을 모아 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양국 의회에 의원연맹을 창설해 HDP와 같은 소위원회를 두어 전 세계를 상대로 한미 의회가 서로 돕고 공동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작년 8월 우리 국회를 방문한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양국 의회가 통과시키기로 약속함에 따라 우리 국회는 이 결의안을 지난 2월 통과시켰고, 그 결의문의 중요한 내용으로 한미·미한의원연맹 창설이 포함돼 있다”며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인데, 방미 기간 중 한미·미한의 의원연맹 창설에 관한 미 의회 의사가 모아지면 양국간 문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가치를 함께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 만큼 미국 방문시 많은 도움 바란다”고 당부했다.

뷰캐넌 위원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민주주의 분야에서 한미가 함께하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달에 의장님을 미국에서 뵙기를 기대하며, 매카시 의장과 제가 힘을 합치면 더 멋진 파티를 열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한기호 국방위원장, 김석기·신원식·김병주 의원과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

김영주 국회부의장, 콜롬비아·엘살바도르 공식 방문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5월 18일 엘살바도르 대통령실에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중남미 주요 국가인 콜롬비아와 엘살바도르를 공식 방문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콜롬비아 하원의장·외교위원장·외교부 장관, 엘살바도르 대통령·국회의장, 중미통합체제(SICA)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의회 외교를 통한 우호 협력 증진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발 협력 확대 등 의회 차원의 경제·공공외교를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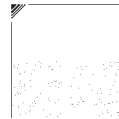
김 부의장은 콜롬비아 방문에서 콜롬비아 라세로 하원의장, 론도뇨 하원 외교위원장, 두란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이전 정부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서면으로 표명했던 만큼, 신정부에서도

지지 태도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의장은 또 엘살바도르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만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요청하면서 개발 협력, 보건, 교육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카스트로 국회의장과도 만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요청했고, 카스트로 의장도 엘살바도르 정부에 긍정적으로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 부의장의 콜롬비아·엘살바도르 방문은 2015년 이후 첫 국회의장단 방문으로 양국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공식 방문에는 권성동, 박정, 김주영, 양금희 의원 등이 함께했다. 🇰🇷



정우택 국회부의장, 라오스·한 의원친선협회장 면담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5월 22일 국회부의장 집무실에서 린캄 두앙사완 라오스·한 의원친선협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5월 22일 국회부의장 집무실에서 린캄 두앙사완 라오스·한 의원친선협회장을 만나 양국 간의 경제·문화 교류 확대, 의회 협력 강화,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께오짜른 씨야잉냥 라오스·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쏭깐 루앙무닌턴 주한라오스대사를 비롯해 라오스 의회 주요 실무진도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라오스를 방문한 정 부의장은 린캄 협회장을 만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현장을 시찰했으며,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정 부의장은 “95년 재수교 이후 짧은 기간에도 라

오스와의 우호 협력 관계가 큰 진전을 이뤄 기쁘다”며 “의회 간 활발한 교류 전통을 더욱 공고히 해 작년부터 이어져 온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린캄 협회장은 이에 “한국의 선진화된 국회 시스템을 배우고 의회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MOU 체결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화답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도 요청했다. 정 부의장은 미래 첨단도시 건설과 하이테크 산업 유치를 목표로 하는 라오스 측에 “6·25 전쟁 이후 황폐화되었던 부산이 한국을 대표하는 스마트시티로 거듭난 과정을 본다면 라오스의 발전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사무처, '사랑의 PC 기증식' 개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왼쪽에서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국회 본관에서 '사랑의 PC 기증식'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5월 10일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정보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PC 기증식'을 개최했다.

국회사무처는 노후PC 교체사업으로 반납된 PC 1천대를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장애인IT고용협회, 한국IT복지진흥원,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등 비영리단체 5곳에 기증했다.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은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중고PC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운동으로, 디지털정보 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기증된 PC는 수리 및 재장비를 거쳐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보급될 예정으로,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내용연수가 지난 정보화기기를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의 노후 불용 PC기증을 통해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PC기증이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한편 사회적 나눔 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광재 사무총장과 홍형선 사무차장 등 국회사무처 관계자와 김용일 한국장애인IT고용협회장, 고만규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장, 박창수 한국IT복지진흥원 부원장, 유시영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부원장, 이필광 한국장애인문화협회장 등 기증 대상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



특집

전원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 및 앞으로의 과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 동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논의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는
2004년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 이후 20여 년 만에 열려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이번 전원위원회의 활동을 결산하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 등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집자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활동의 결산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선거제도 관련 시민참여단 공론화 실시 결과 분석

송기복 국회의장실 정책수석비서관

선거제도 개편 등 앞으로의 과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활동의 결산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2004년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에 관한 토론 이후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는 개최 사실만으로도 조야의 관심을 끌만한 이슈였다. 더구나 안건 자체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편이어서,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 각자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효과도 있었다. 총 100명의 의원이 나흘 동안 발언을 이어간 사실 자체가 이번 전원위원회의 중요성을 잘 드러낸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국회의 회의로는 본회의를 첫손에 꼽아야 한다. 그러나 본회의는 의사 절차상 최종회의의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어, 언제든지 표결 돌입 동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 대중의 기대와 달리 본회의는 기능상 의안에 대한 깊은 심리를 진행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회의로 대응하고자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계가 많아, 심지어 해당 위원회 회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의원들이 의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표결에 임하는 폐단이 생기기도 했다.

전원위원회는 이처럼 진퇴양난의 곤란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고안해 낸 제도적 혁신이다. 핵심은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되, 갑작스러운 표결 돌입에 대한 부담을 사전에 제거해, 해당 의안에 대한 자유로운 심의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난 20년 동안 역대 국회가 전원위원회 제도를 자주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의 의안들 가운데,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이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에 비견할



이국운 교수
한동대 법학부



만큼 중요한 것들, 그리고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지 않았을까?

의원 개개인의 속내 드러난 흥미로운 실험

20년 전의 경험에 비해, 이번에 개최된 전원위원회는 그 의안의 성격 측면에서 흥미로운 실험의 의미를 지닌다.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에 관한 전원위원회는 찬성과 반대의 일도양단적 결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더 나은 논거 및 정황들을 찾고 공유하려는 설득마당의 의미가 강했다. 이에 비해 이번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열린 문제에 대해 의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논거 및 정황과 함께 제시하는 열린 토론의 형태였다. 그래서 전원위원회에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했던 세 가지 개편안도 구속력을 가지기 어려웠다.

이런 까닭에 이번에는 논의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방향으로 발산됐고, 이를 이유로 일각에서는 의안 자체가 전원위원회의 심의에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에는 일부 수긍할 점이 있으나, 본회의와 전원위원회의 차이에 주목한다면, 적어도 실험적 가치를 확인하는 데는 인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가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세 가지 방안에 담길 수 없었던 의원 각각의 진짜 속내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나흘에 걸친 이번 전원위원회의 토론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첫 번째 발언자였던 이탄희 의원의 호소가 전체 발제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이다. 이 의원은 7분 발언을 통해 현재의 정치권 구성원 모두가 양

대 정당의 적대적 공존 구도의 방조자이며, 이 구도 자체를 혁파하려면 현재의 선거제도가 반드시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선명하게 내세웠다.

이 짧은 연설은 유튜브 등을 통해 널리 퍼져, 삽시간에 한국 사회의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울림을 얻었고, 따라서 그 뒤에 등장한 다른 의원들은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이 의원의 입장에 반대하는 경우는 이 의원보다 더 나은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야만 했다. 개인적인 평가지만, 나흘 내내 이 구도 자체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고, 그 점에서 이탄희 의원의 첫 번째 발언이 전원위원회의 논의 구도를 규정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전원위원회의 진행방식에 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먼저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경청하는’ 위원회인데, 재석의원이 적어 전원이 ‘발언하는’ 위원회처럼 운영된 점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동료 의원의 발언 내용을 회의장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다시 언론을 통해 반응하는 것이 의원들 사이에서 일상화된다면, 이는 의회주의의 근본원리를 거슬러 소위 진영 논리를 의원들 스스로 강화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만약 회의장 자체의 구조가 문제라면, 최근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에서 확인했듯이, 전원위원회의 장소 자체를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의회와 비슷하게 작고 소박한 공간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 나아가 국회법을 개정해 전원위원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전원의 출석 및 재석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필요하다면 의장의 의원 강제출석 제도를 두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

선거제도 관련 시민참여단 공론화 실시 결과 분석

대한민국 정치사 최초로 선거제 개편을 의제로 한 공론조사가 지난 5월 13일 마무리됐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5월 6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선거제 개편과 관련된 주요 의제들에 대해서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KBS가 생중계한 이 공론조사에서 지역, 성별, 연령 등 인구표본에 맞춰 선발된 시민참여단은 패널토의·전문가 질의응답·분임토의 등을 통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시했다. 이번 공론조사 결과는 추후 여야의 합의안 모색에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가 되리라 전망된다.

공론조사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압도적 지지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 현행 선거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는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지역구 선거제 방식을 살펴보면 소선거구제 56%, 중선거구제 40%의 선호도를 보였다. 기존에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 소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지만, 중선거구제 역시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다. 주목할 점은 도농복합선거구제 선호 의견이 59%나 나왔다는 점이다. 도농복합선거구제란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농·산·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지난 4월 국회의장실이 실시한 국회출입 정치부기자 대상 웹조사에서도 도농복합선거구제 찬성 의견이 77.3%로 나타났다. 기자 대상 웹조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국회의장실



사의 결과가 공론조사 결과와 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여·야 협상과정에서 도농복합선거구제가 절충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의견 변화 나타나

이번 숙의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두 가지 결과가 나왔다. 첫 번째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높은 찬성 의견이다. 숙의를 거친 후 비례대표 확대 의견이 숙의 전 27%에서 무려 43%p가 상승하며, 70%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응답자 중 42%가 여성, 청년 등 다양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으므로 비례대표 증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시에 비례대표의원이 나라보다 소속 정당을 위해 활동하므로 비례대표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47%로 나타났다. 이는 '진영전사 확보 수단'이라고 비판받는 현 비례대표 제도를 개선해, 비례대표 제도의 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한 의견 변화다. 숙의 전에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견이 65%로, 국민의 국회불신이 매우 강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숙의 후에는 의원 정수 축소 의견(37%)이 28%p나 감소했고, 오히려 의원 정수 확대 의견이 33%로 13%에서 20%p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비례대표 투표 방식에 있어서는 정당에만 투표하는 현행 폐쇄형 명부제보다 개방형 명부제 선호(72%)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개방형 명부제는 비례대표 투표 시 기존의 정당에만 투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당이

공천한 후보 중 국민이 직접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인데, 쉽게 말하자면 '비례대표 직선제'라고 할 수 있다.

유권자의 의사를 더욱 명확하게 투표 결과에 반영할 수 있고 밀실 공천 등 비판을 받았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과정에 대한 신뢰 회복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개방명부식 비례대표 직선제라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민참여단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토론하고,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선거제 개편의 큰 방향성이 정해진 것이다.

또한 숙의 전후로 매우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치권이 선거제 개편의 내용과 그 필요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 드린다면, 많은 국민이 기존의 편견에서 벗어나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내년 총선을 헌법정신과 선거법 취지 등에 부합되도록 제대로 치러내려면 선거법 협상이 금년 상반기 중에는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현역의원과의 정치신인 간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제공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며,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공론조사 결과 등 선거제 개편에 대한 참고자료가 충분한 만큼, 이를 토대로 조속히 선거제 개편이 마무리되길 바란다. 🍵

선거제도 개편 등 앞으로의 과제

현재 우리 국회의원의 수는 법에 300명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 중에서 지역구 의석은 253석이며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이다. 253석의 지역구 의석을 소선거구제도 뽑는 현행 선거구제에서 사표의 비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해 비례성이 크게 취약하다. 이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열띤 논의 끝에 크게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올렸다.

제1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안이다. 지역구에서는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로 한 명씩만 뽑고 전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득표 비율대로 정당별 비례대표를 주자는 것이다. 제2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한 뒤 당선된 지역구 의석수에 더해 비례대표 의석을 얻어주는 것이므로 양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그리고 준(準)연동형은 비례대표 의원 중 절반에 대해서만 연동형으로 뽑는다는 의미이며, 지난 선거법 개정 시 절충된 부분이다. 따라서 제2안은 결국 위성정당을 방지하면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자는 안이다. 제3안은 지역구 도농복합선거구제와 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도농복합선거구제로 인해 지역구 선거에서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3명 내지 10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되고 농촌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가 유지된다.

그러나 이 안에는 비록 도시지역에 한정되지만 중대선거구제 자체가 가지는 단점들이 있다. 첫째, 선거구가 넓어지고 후보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선거구가 넓어져서 선거



임지봉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운동과정에서 더 고비용선거가 되어 부자들만 국회에 진출할 우려가 있으며, 둘째,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명망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서 인지도가 높은 다선의원들이 많아져 정치적 역동성이 줄어들 수 있고, 셋째, 1위 당선자와 후순위 당선자의 득표수 차이가 클 경우에 평등선거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우리나라가 과거 한때 채택했으나 ‘여야 동반 당선’이나 ‘여야 나눠먹기식 제도’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선거구 조정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결국 자기 지역구가 사라지는 수도권 지역의 기존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 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 제3안은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이 후보자의 명부만 작성하고 그 순위는 선거인이 선거를 통해 결정하는 정당명부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핵심은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 안의 장점을 어떻게 잘 조합시켜 최선의 선거제도로 만들어내느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명심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국회의원수 증원안처럼 당장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이고, 둘째, 선거법 개정권을 준 기존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당 득표수와 의석수 사이 비례성 강화해야

그러면 선거제도 개편의 큰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 정당의 득표수와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 강화’다. 소선거구제에서 나오는 사표 발생의 효과를 줄여서 승자독식구조를 해소해야 하며, 더 확실하게는 정당

득표율로 정당별 의석수를 배분해서 지역구 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대표성 강화를 통해 ‘지방 소멸’을 방지해야 한다. 지금 현재 수도권은 우리나라 면적의 10.6%를 차지하는 데 그치지만 인구는 50.2%가 집중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가 인구수만 보면서 선거인수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선거인 수가 2대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위헌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너무 인구수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역대표성을 키워 지방 소멸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지역대표성을 갖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방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제2안을 중심으로 제1안과 제3안의 장점을 가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2안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더라도 위성정당 방지 방안은 꼭 마련해야 한다. 지역구선거 참여 정당에게 비례대표명부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비례대표 공천 방식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추천시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공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명부 제출시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을 첨부하도록 하며, 위반시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두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

국회 전원위원회 제도의 운영현황

국회는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2023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단일 안건을 4일동안이나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총 100인의 의원이 토론 및 질의에 참여한 것은 제헌국회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의회는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와, 상대적으로 소규모(20인 내외)의 의원이 모여 소관 분야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 등 크게 두 종류의 회의체로 운영된다. 따라서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는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모순형용사로 들릴 수 있지만, 국회 전원위원회는 그 연원이 제헌국회까지 올라갈 정도로 오랜 제도다.

제정 국회법에서 전원위원회를 도입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제정안 초안 작성시 ‘영미 등 선진국의 관련법을 참고했다’는 위원장의 발언을 고려하건대 1948년 제헌국회 당시에 전원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영국과 미국 의회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제정 국회법에서 전원위원회 관련 조문은 제15조로, “국회는 특별한 안건을 부탁하기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동법 제55조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 이후 전원위원회로 회부하고, 전원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된 후 7일 이내에 심사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전원위원회는 제헌국회에서 2건, 제2대국회에서 4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개최된 이후 1960년에 폐지됐다. 이 중에서 3건이 예산안과 관련된 안건인데, ‘1949년도 세입세출예산안(1949.4.28.~29.)’, ‘1951년도 내무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1951.11.29.)’, ‘1952년도 예산안(1952.4.8.)’이 여기에 속한다. 나머지 3건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동의안(1948.9.16.~17.)’, ‘헌법개정안



(1952.7.3.~4.), '휴전대책에 관한 건(1953.6.13.)'이다. 건국 초기에 전원위원회는 예산안을 비롯해 헌법개정·휴전대책 등 국가적으로 중대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됐음을 알 수 있다.

이후 40년 만인 2000년 제15대국회 임기 말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전원위원회가 재도입됐다. 전원위원회 제도를 재도입한 목적은 '위원회 중심주의로 인한 본회의 심의의 형식화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가 확립되면서 의원들은 소속 위원회 안건이 아닌 경우 충분한 토론과 심의기회를 갖지 못한 채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안건에 대해서 의원 전원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한 것이 전원위원회 제도인 것이다.

전원위원회 소집대상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이다(국회법 제63조의2). 제정 국회법에서 '특별한 안건'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전원위원회 소집 대상안건이 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00년 이후로도 전원위원회가 개최된 안건은 3건에 불과하다. 제16대국회에서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2003.3.28.~29.)

과 제17대국회에서 '국군부대의 이라크파견 연장동의안'(2004.12.9.) 그리고 제21대국회에서 '공직선거법'(2023.4.10.~13.) 등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전원위원회는 여전히 '전체 의원이 모여서 주요 의안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활성화되지 못해왔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도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나 숙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원위원회 제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1960년에 제2대국회에서 전원위원회 제도가 폐지될 당시에도 전원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중복심의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의식이 주된 배경이었다. 당시에는 본회의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가 타당했을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입법의 복잡화와 다양화, 그리고 폭증으로 인해 분업의 원리가 적용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본회의 심의단계에서 모든 법안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는 국가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의 장으로서 전원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 이 원고는 전원위원회의 도입 규정과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우주항공·인공지능 (AI)·ICT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 선도”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Q.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과방위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자본권력·정치권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의 독립, 원자력의 안전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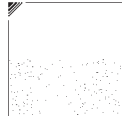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제 사회의 선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등 3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어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방송이 정치권 등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뉴스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올해 과방위의 주요 현안과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대통령실이 공공연하게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위해 검찰을 동원하고, 감사원이 방송통신위 감사에 나서는 등 방송 장악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과방위를 넘어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된 것은 그동안 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여왔기 때문입니다. 방송이 경쟁의 대상이 되는 일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과방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방송법’ 등 3개 법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또한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1.5톤 규모의 실용급 위성 발사가 가능한 7번째 국가로서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누리호와 달궤도선 발사를 성공했다고 해서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과 바로 경쟁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투자와 노력,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예정되어 있어 국민 건강, 원자력 안전, 해양 생태계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용인한다면 국민 건강은 담보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정화 시설과 자료 등에 대해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제21대국회에서 과방위가 거둔 주요 성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가장 먼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요 성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의 공영성, 공익성, 독립성, 중립성의 4대 헌법적 가치를 사수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방송을 장악하려는 유혹과 시도가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송법’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 MWC(Mobile World Congress) 개최’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뛰어난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지원의 미비, 자금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멀티플랫폼, AI 로봇과 드론 등 최신 기술을 국회 MWC를 개최해 국민께 소개하고 공유하고 싶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지난 5월 15~16일 이틀간 국회에서 ‘국회 MWC 2023’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오더의 저주’,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규모 주문을 받아도 부품 대금 납부 시점과 제품 대금 결제 시점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정

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는데 국회 MWC에서 과기부가 스타트업 등의 지원을 위해 1조 4천억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창의성과 기술력을 갖춘 국내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정부가 조금만 지원해준다면, 이들이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청 개청’ 추진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1.5톤 규모의 실용급 위성 발사가 가능한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우주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노력, 육성정책이 절실합니다. 기술개발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전제되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조직과 정부의 역할이 필수입니다.

우주개발 선진국이 되기 위한 우주항공청 개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과 정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위원장님의 정치 철학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과방위 여야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A. 그동안 플랫폼 규제와 우주항공·인공지능(AI) 기술력 확보, 미디어 산업 경쟁 강화, 방송 공영성 확보, 원자력 안전 등 산적해 있는 현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상임위로 평가받았으면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방안 마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과 정책으로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맞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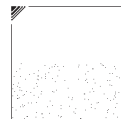
글 윤성혜

※ 본 인터뷰는 새 과방위원장 선출 이전에 이뤄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사통팔달의 고장 천안 자연과 문화, 역사 어우러진 대한민국 미래 중심으로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하늘도 편하고, 땅도 편하고,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도 편한 곳’이라는 천안(天安)은 조선시대부터 한양에서 충청·전라·경상도로 가는 삼남대로의 분기점인 교통의 요지였고 유관순 열사, 이동녕 선생, 김시민 장군 등 많은 애국 열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충절의 고장이다. 신록이 나날이 푸르름을 더해가며 여름을 향해 달려가던 5월 어느 날 천안에서 문진석 의원을 만나 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의정활동 이야기를 들었다.

증개축 앞둔 천안역과 문화, 예술, 휴식공간인 천호지공원

천안역에서 국회보 취재진을 맞은 문진석 의원은 천안역 증개축 사업 이야기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천안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천안역은 이용객이 하루 3만 명에 이르는, 전국 9위의 역이지만 2003년 민자역사를 추진하다 금융 위기로 중단되면서 20년째 임시역사로 방치돼 왔습니다. 그래서 천안역 증개축은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제21대국회 입성 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천안역 변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해 2021년 설계 예산으로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고 지난해에도 국비 5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총 800억 원이 투입되는 천안역 증개축 사업이 올해 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며 “천안역 증개축과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어서 공사가 끝나는 2026년이면 천안역과 역 주변이 완전히 새로운 모

습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 휴식을 위해 즐겨찾는 천호지공원으로 이동한 문진석 의원은 “생활체육공원으로 이용돼 오던 천호지는 올해 수변경관 개선사업을 완료해 천호지공원으로 새롭게 준공됐다”고 소개했다. 43억 원이 투입된 천호지공원사업은 천호지를 찾는 젊은이들의 욕구와 이용 형태를 고려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문화·예술, 휴식, 휴양, 건강, 생태 등 5개 주제로 나눠 조성했다.

천호지공원을 내려다보는 곳에 위치한 단국대 천안캠퍼스는 지난 4월 ‘4기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대학’에 최종 선정됐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 내 유휴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을 건축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사업이다.

문 의원은 “국가선도형 산학연 혁신클러스터가 이곳에 조성되면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천호지공원 산책로에서

수도권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이어지는 광역 교통망 구축 추진

1987년 개관한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에 관한 유물과 자료를 보관, 전시하며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곳으로 7개의 상설전시실과 특별전시실에서 유물과 모형 등을 전시하고 있다. 정면에 높이 51m의 겨례의 탑이 있고 태극기마당, 겨례의 큰마당, 105인 사건을 상징하는 105인 계단, 통일염원의 동산 등이 있다.

8월 11일부터 광복절인 15일까지 독립기념관 겨례의 집 광장에서는 ‘K-컬처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의 정신과 문화가 결합한 K-컬처를 한눈에 보여줌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한류를 세계로 더욱 크게 뻗어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천안시가 준비하고 있는 K-컬처 박람회는

기존 케이팝 위주 공연과 축제가 아닌 민족문화 정신인 K-소울(soul)이 깃들어 있는 한류 문화를 소개하는 차별화된 박람회”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수도권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이어지는 광역교통망 구축(전철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독립기념관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 독립기념관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지를 대중교통으로 연결시킨다는 상징적인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다”며 “이는 충청권 전체의 발전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초반 폐기물 처리 업체를 창업해 대표이사를 지낸 문진석 의원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며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2002년 진남경기도지사 후보,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했던 그는 문희상, 천정배 의원 등과 인연을 맺으며 교류



천안역 증개축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진석 의원



천안타운홀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천안시 전경

하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충남시민캠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그 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으로 활동하다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한 후 제21대국회에 입성했다.

세비 일부 기부하고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 가입

2020년 총선에 나서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매월 세비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던 그는 당선 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월 약속을 지켜왔다. 지난 5월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됐지만 문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지난 2021년 12월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대한적십자사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도 가입하며 1억 원 기부를 약정해 올 연말이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2021년 문을 연 천안타운홀은 천안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공간이다. 높이 204m 최상층 47층은 360도 펼쳐지는 파노라마 전망대, 갤러리, 유리온실 카페 등으로 구성돼 천안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역할을 하고 있다.

47층 전망대에서 천안 시내를 내려다보며 현안을 챙겨보던 문진석 의원은 “높은 빌딩이 들어서고 여기저기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것만이 도시의 발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천안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산과 하천, 곳곳에 숨어있는 민족 정신을 스토리로 결합해 자연과 문화, 역사가 어우러진 생태도시 천안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일하는 국회의원법’이 아직 통과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는 문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국민이 원하는 법이고, 정치문화를 바꾸는 실천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천안 글 김현아 사진 유유키

‘너희 중에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자신이 나서서 지도자가 되고 본이 되어라’ (도산 안창호 선생)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약사 출신으로 한국여약사회 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등을 거쳐 비례대표로 제21대국회에 입성한 서정숙 의원은 도산 안창호 선생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 그래서 인생 좌우명도 안창호 선생이 상해에서 한 연설 중 ‘너희 중에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자신이 나서서 지도자가 되고 본이 되어라’라는 ‘지도자론’이라고 했다. 서정숙 의원을 국회보가 만나 그의 인생 좌우명과 의정활동 이야기를 들었다.

서정숙 의원은 어릴 때부터 ‘무엇’이 되어야겠다는 목표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항상 고민하며 살았다고 했다.

“제약회사 연구원과 제약회사 전문지 기자로 활동할 때나 그 후 약국을 운영할 때도 늘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업가의 아내이자 종가집 만며느리였던 친정어머님은 늘 제게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르침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육아에 전념하고 있던 30대 후반 서정숙 의원은



주위의 권유로 2천여 세대 아파트의 어머니회 회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어머니회 회장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일하려고 노력했고 ‘진인사대천명’의 각오로 마음을 다잡으며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때 서민층부터 부유한 사람들까지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나누면서 크고 작은 일을 경험했던 것이 ‘생활 정치인 서정숙’의 자양분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활정치의 경험은 강남구 여약사회 회장 등 크고 작은 단체 활동으로 확대되었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로 서울특별시의원에 당선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서 의원은 공공장소 금연, 여성 화장실 확대, 서울시 공기 질 개선을 위한 조례, 서울시의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왕 동상 설치, 광화문에서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 조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활 현안과 관련된 조례 제정과 민원 해결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여의도 입성 후 서정숙 의원은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뛰었다”고 말했다.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그는 우리 사회에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동안전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마트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 의무화하는 ‘장애인편의증진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아동’과 ‘장애인’ 관련 입법에 힘을 쏟았다. 또 국민들의 전인건강한 삶의 터전으로서 건

강한 도시 인프라 지원을 위한 ‘건강도시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제약바이오 육성을 위한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정치란 공동체의 이익과 공동선을 추구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일”

서 의원은 올해는 특히 ‘약자 복지’ 관련 법안에 더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팬데믹으로 야기된 경제 양극화와 고물가,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더욱 힘든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복지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전인건강한 한국인’의 조건으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건의료, 복지분야 관련 민생 현안에 대해 더욱 충실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현장 방문과 전문가 의견 청취,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 입법 개선까지 입법 프로세스를 입체적, 유기적으로 연결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극복하는 선진복지 시스템의 선순환적 구조를 확실히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서정숙 의원은 “안창호 선생의 ‘지도자론’ 덕분에 정치인으로서 정치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저에게 있어서 정치란 공동체의 이익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 초심을 잊지 않고, 하루를 일 년같이 소중하게 여기며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진정한 민생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임진완



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이 김태호 의원을 칭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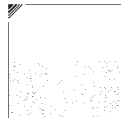
“정치인에게 중요한 ‘경청의 미덕’을 지니신 분”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6월호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은 김태호 의원이다. 지난 달 그를 추천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은 “정치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경청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김 의원님이 그런 분이시다. 외통위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정책과 현안을 해결할 때 무엇보다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태호 의원은 “이원욱 의원님께서 사람을 잘 못 보시는 것 같다”며 웃었다. “사실은 제가 이원욱 의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생각이 깊고 합리적이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신 분이죠. 제가 야당 의원님들과도 두루 잘 소통하고 위원회 운영에서도 협치와 합의를 존중하려고 노력해온 것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3선의 김태호 의원은 1992년 14대 총선을 앞두고 이강두 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치의 길을 걸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것은 1991년 작고한 김동영 전 의원과의 인연이 컸다고 말했다.

“민주화 과정에서 당시 전 대통령(YS)의 최측근이었던 고(故) 김동영 의원님 댁에서 아이들 공부를 봐주면서 하숙을 했는데, 그때 민심의 소중함과 무서움을 목도했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올바른 정치를 해야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지요.”

이후 고향인 경남 거창에서 1998년 도의원에 당선된 후 거창군수를 거쳐, 2004년 6월 재보선에서 경남도지사에 당선된 후 2006년 재선에 성공했다. 도지사 첫 당선 당시 만 41세로, 역대 최연소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이었다.

김태호 의원은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킨 일을 보람있었던 일로 꼽았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결의안으로 기존 외교·안보를 비롯해 경제 안보 및 기술 분야에서도 동맹·협력관계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방문에 동행해서 한미동맹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역대급 성과를 내는데 동참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상에 힘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마다 보람을 느꼈지만, 이번에 우리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국민방문을 동행해 성과

를 내는데 힘을 보탠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김태호 의원은 제21대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발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일도 언급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고향을 떠난 분들에게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이 활로를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뿌듯합니다.”

김태호 의원은 “정치가 국민에게 민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금처럼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면서 야당은 국정에 협조하고, 여당은 야당을 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지방이 위기입니다. 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의 짐을 덜어드리고 미래의 길을 여는 것이 정치가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해서 저를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는 국민에게 ‘쓸모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다음 칭찬주자로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동안구을)을 추천했다.

“이재정 의원님과 저는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로 호흡을 맞춰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재정 의원을 소개할 때 항상 ‘알면 알수록 진국’이라고 강조합니다. 야당 간사 역할이 쉽지 않을 텐데도 묵묵하고 강단 있게 잘 해나가는 것 같아 든든하죠. 여야를 떠나 이재정 의원처럼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글 윤성혜 사진 김지범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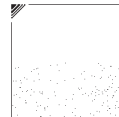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신정훈 의원은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학생운동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했고, 농촌에서 농민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했다. 30대에는 지방자치 공간에서 세상을 바꾸겠다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했다. 이렇게 한 길을 걷다 보니 늘 기성정치와 부딪치고 기득권과 싸우기도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제 국회에서 세상을 바꾸려는 꿈을 펼쳐가고 있는 신 의원을 만났다.

전남 나주의 농촌마을에서 태어난 신정훈 의원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왔다. 착실하고 평범한 학생이었던 그에게 1980년 5월 역사적인 사건이 터졌다. 고교 2학년 때 겪은 5·18 민주화운동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총소리가 들렸고 계엄군에 쫓기는 시위대의 모습도 봤다. 그는 “가슴 속에 분노가 일었다. 젊은 마음에 ‘불의에 맞설 것’이라 결심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그는 고려대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해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학 내내 학생운동에 참여하다가 19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투쟁 당시 선봉대에 서게 됐



다”고 했다.

고향으로 돌아가 수세(水稅) 거부운동 등 농민운동에 투신

“점거농성이 끝나고 2년 3개월간 수감 도중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 마지막 날 겨우 아버님 배웅을 하고 교도소로 돌아왔죠. 1987년 7월 석방이 되자 나주로 낙향을 했어요.”

신 의원은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다른 동료들과는 다른 길을 택했다. 대부분 대학에 돌아가 복학생협의회 등을 구성해 학생운동을 이어나갔던 반면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민운동에 투신했던 것이다. 이후 그는 전국 수세 거부 대책위원회 결성을 주도하며 수세 폐지 운동을 이끌었다.

“수세가 뭔지 아세요? 당시 농민조합원이 ‘농지개량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인데, 명칭만 조합비였지 사실은 농사에 사용하는 물값이어서 다들 수세, 물세 이렇게 불렀죠. 쌀농사로 적자만 내는 농민들에게는 가혹한 일이었죠. 조합원이 수세를 내지 않으면 인정사정없이 차압까지 당했으니까요.”

1995년 전남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해 최연소 도의원이 됐고 5·6대 전남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그는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인 호남 지역에서 그냥 무작정 깃발을 들었는데 승산 없는 싸움에서 이겼다”며 “수세 폐지운동 등 지역에서 오랫동안 헌신한 세월을 지역민들이 알아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2002년부터 민선 3·4기 나주시장을 지냈다. 그는 “시장을 하면서 현장 밀착형 민생자치의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었다”고 했다.

“2003년 나주시장으로 일할 당시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몇년 묵은 정부미로 급식으로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

은 먹거리를 한번 쟁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죠. 나주에서 시작된 학교급식 제도가 무상급식 제도로 전국화되면서 전국 급식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신 의원은 2014년 보궐선거를 통해 제19대국회에 입성했다. 2016년 지역에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당을 지킬 것”이라며 민주당에 남았다. 이후 낙선한 그는 청와대 비서실 농·어업 비서관을 지내고 2020년 제21대국회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회에 들어온 신정훈 의원이 한결같이 외치는 말이 있다. 바로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1995년 도의원을 지내면서부터 지방자치 현장에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인구 감소라든가 지역 소멸을 현장에서 실감했어요. 국회에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지방의 문제를 다루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을 내놓았고 2005년 나주에 혁신도시를 유치했습니다.”

신 의원은 대학 등 학창 시절을 제외하고 37년간 나주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그는 아직도 밭이 딸려 있는 농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선거 때만 지역에 내려가는 의원들은 종적으로 횡적으로 국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37년간 한 곳에서 세상을 보다 보니, 많은 것을 느낍니다. 막상 지방에서 30년 역사를 돌아보면 30년 전이 20년 전보다 더 나았고, 20년 전이 10년 전보다 나았고, 10년 전이 지금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방의 위기는 심각합니다. 정치가 지역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일이라 한다면, 그것을 소명으로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제 소명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글 박민선 사진 김진원

쓰레기 소각장 문제, 소상공인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쓰레기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이은주·장혜영 의원(정의당)은 4월 24일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쓰레기 소각장을 주제로 ‘쓰레기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소각장(매립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마포구와 세종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 당사자인 주민의 증언과 전문가 진단,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석해 입장을 개진했다. 또한 이를 통해 종합적인 대안 마련과 발전적 시사점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세종시 송성리 소각장과 관련해,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이 나서 지역 상황을 보고하고 김동섭 세종시 북부권 쓰레기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 이 반대 증언을 펼쳤다. 또 세종시 관계자로 진익호 자원순환과 과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폐기물 소각장(매립지)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점점 격화되는 반면, 지역 주민의 안전 및 권리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 특정 지역에 소각시설을 몰아주면서 주민들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 밀실 강행 추진 방식은 중단해야 한다는 점,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에 따

른 국비 지원 정책은 무분별한 폐기물 배출 증대로 이어지며 발생지처리 원칙을 준수하고 자원 재활용, 배출 억제 정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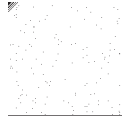
이은주 의원은 “필수적인 공공시설인 동시에 대표적인 혐오시설이기에 행정당국은 주민 소통과 설득에 더욱 공을 들이고, 공개적인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지역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소각장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정책방향 간담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은 4월 25일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지형 법무법인 난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해 소상공인 구인·구직 연계 강화, 소상공인 공동 채용과 공동 교육훈련 확대, 소상공인 인식개선 및 바로알기 지원 강화, 소상공인 공제사업 활성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



시켰다.

토론자로는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 김준호 고용노동부 과장, 김종철 씨제이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장, 황인자 한국선물포장협회장 등이 참석해 규모, 업종, 경쟁력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의 인력 보호 지원 및 육성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제화를 통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과 소상공인 인력확보 지원, 소상공인 근로자 능력개발, 우수인력 유입 촉진 및 고도화 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 섬 지역의 택배 비용 경감을 위한 국회토론회

서삼석·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 26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섬 지역의 택배 비용 경감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섬 지역에 추가로 부과되는 택배비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 부처 및 택배 4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용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수부 시행사업에 대한 설명을 필두로 섬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토부, 행안부, 물류협회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노력과 관련 대책 등이 논의됐다.

이어 ‘섬 지역 택배 서비스 유형별 이용실태’, ‘23년도 섬 지역 택배비 지원사업 설명’을 주제로 신미영 한국섬진흥원 연구기획팀장·도경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이두희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장,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장, 김근표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장, 신은규 한국통합물류협회 생활물류지원팀장이 참여해 도서지역 주민 택배비 지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세미나

이명수·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5월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입생 충원 미달과 학생 유출로 재정 위기에 이어 존폐 기로에 놓인 지방대학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대학 소멸 우려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그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부여해 지역산업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서경석 공정사회실천연대 이사장은 지방대학 위기에 대해 설명하며 “저출산 대책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외국인에게 국적을 주고 미국처럼 다문화국가가 돼야 한다”며 외국인노동자 제도를 지방대학 살리기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운선 산업연구원 박사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아닌 부모에게만 취업비자를 발급해, 유학생은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유학생의 부모만 지역산업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진 주제 토론에는 박지영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강주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 사무관, 박지원 법무부 체류정책과 사무관, 최용민 위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해 인구감소와 지역대학 위기 대응 방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현황, 정부와 대학,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범정부적인 커뮤니티 설립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구제를 위한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

김한정·김종민·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9일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구제를 위한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대기업들의 벤처·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및 기술탈취 논란이 커지자 국회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아이디어 탈취와 관련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해기업의 사례와 요구사항을 듣고 의원들과 함께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범부처 협의체 구성은 물론 제도 개선, 입법 제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아이디어, 성과물 탈취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처벌 규정 신설, 행정조사 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 윈스톱 구제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아이디어, 성과물에 대한 정당한 가치 평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를 포함한 피해 사실 입증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부부처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훈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현재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은 물론 경찰청, 국정원 등 관련 기관 및 부처들과 함께 범정부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윈스톱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이 밖에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정당한 기술거래가 진행될 수 있는 대안 역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우주 인력 양성 정책 토론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9일 ‘우주 인력 양성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다가오는 우주경제 시대에 대비해 인력 양성·수급과 관련한 산·학·연·관의 현안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2년 이후 국내 기업의 우주산업 활동금액이 급증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경제가 개화되고 있어 지속 성장을 위한 인력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팀장이 ‘우주인력 양성 정책 방향’을,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센터장이 ‘우주기술 인력수급 분석’을, 송성찬 한화시스템 연구소장이 ‘우주 기업의 인재상과 인재 양성·확보 노력’을, 김신명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연구교수가 ‘우주 인력 양성 사례 및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박재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 이상철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이준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이 ‘우주경제 시대의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역할과 협력’을 주제로 토론했다.

· ‘여행, 힐링이 되다: K-웰니스, 국가전략산업으로’ 정책토론회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5월 10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여행, 힐링이 되다: K-웰니스, 국가전략산업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나타날 기대효과와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마다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



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련 부처들과 협력체계를 가동하도록 했다. 또한 웰니스 산업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배현진 의원은 “현재 세계 웰니스 시장은 이미 5천조 원을 돌파했지만 우리 산업은 기초적인 법도 없이 방치되어 왔다”면서 “K-웰니스 산업 육성법을 통해 산업의 골자가 세워지고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최희정 차의과대 교수(웰니스&스파연구원장),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 등 웰니스 관광 산업을 대표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국내 웰니스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상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과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법안을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웰니스 사업들이 범부처 협의체계 하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방안 토론회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는 5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해외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및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좌장은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맡았

고, 서정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연구위원과 신희영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원이 해외 에너지효율향상제도 동향 및 국내 도입 시사점, 미국의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화 사례 등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의 해외 사례와 비용편익 분석,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민경미 산업부 에너지효율과 사무관, 박지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신철 한전수요전략처 실장은 EERS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의 필요성과 함께 고에너지 가격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강화 전략 세미나

하영제·이현승·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5월 1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강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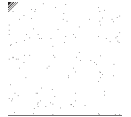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는 우주항공거버넌스 설립과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항공우주협회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주제 발표에서는 안형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정책팀장이 ‘국가 우주개발계획과 우주경제’, 권진희 경상대 교수가 ‘우주항공청 적기 신설과 과제’, 이상훈 사천시 부시장이 ‘우주항공청 연계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영수 항공우주방산정책연구소 소장,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김종필 LIG넥스원 위성체계연구소장 및 발표자들이 여러 부처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들을 종합·조정할 수 있는 우주항공의 신설의 필요성,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현황 (175건, 4.20~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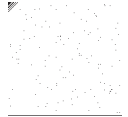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4.20(목)	경기남부 오산천 진위천 안성천 수달 보전 대책	안민석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 5. 자율주행	박완주, 정필모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건설산업 고용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가?	강민정, 김경만, 김두관, 민홍철, 박상혁, 박주민, 양경숙, 우원식, 이동주, 이용빈, 조오섭, 최인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장애예술인의 몸짓·무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김예지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이태규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	고민정, 윤미향 의원실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한준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학술기본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유기홍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공공병원 착한 적자,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춘숙, 고영인, 강은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상속세 유산취득세 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	김병욱(민), 송기현, 유동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4.21(금)	대한민국 국회 해외입양 포럼	이수진, 강민정, 김성주, 민형배, 윤미향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美 정부의 불법 도청 파문: 진단과 대응	김홍걸, 김경협, 박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공영방송 정상화: 좌표와 전략	윤두현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전북 제2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김수홍 의원실	원광대학교 학생회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관련 갈등현안	김두관, 김병욱, 민형배, 임오경, 양기대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MZ와 취업뽕개기 크립토 Job & Fintech 창업 A to Z 완벽이해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규탄 토론회	박성중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북한인권 조사기록의 의미 및 북한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국제사회의 역할	김석기, 태영호 의원실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국가R&D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법제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	정필모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	김희곤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4.24(월)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	용혜인, 강민정, 강은미, 김주영, 남인순, 박주민, 진선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윤호중, 윤재욱, 김종민, 정점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한국형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일차의료발전방향 토론회	김미애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보장제’ 5차 포럼, 고졸 취업 현황 및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탐색한다	이태규, 강득구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소상공인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정책방향 간담회	민병덕, 권명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알뜰주유소 1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	최승재, 김성주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소방설계·감리 분리발주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체익, 오영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쓰레기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증언과 대안 토론회	이은주, 장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서동용, 강득구, 강민정,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박광온, 안민석, 유기홍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4.25(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컨퍼런스	최종윤, 남인순, 조명희, 김원이,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제33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김정재, 최인호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 01	홍영표, 송옥주, 양기대, 홍기원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	윤관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수진, 김경만, 윤건영, 이동주, 전용기, 천준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美반도체 유일주의, 민간학 공동 대응 토론회	양향자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국회 해양수산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	설훈, 윤재갑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금융혁신과 금산분리 긴급 토론회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남양유업 사태 10년, 갑을개혁 운동 10년 불공정 피해 종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	민병덕, 윤영덕, 이동주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우이령길, 조화로운 보전과 활용 토론회: 북악산 사례 적용 가능한가?	정성호, 천준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4.26(수)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	신영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챗GPT와 AI 혁신 시대, 우리 사회의 방향은?	윤희인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정보기본권,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해야!	윤호중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류호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부울경 첨단산업전략 무엇을 할 것인가: 100년 지역먹거리 마련을 위한 집중토론회	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이상현, 전재수, 최인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섬 지역 택배비 경감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서삼석, 위성곤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5060 해외입양인그룹 ‘서울 시스템즈’ 모국방문단 간담회	김미애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글로벌 수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수소 산업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	권명호, 김학용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치료 가능한 실명 질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서영석, 정춘숙, 신현영, 최종윤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4.27(목)	2050 탄소중립과 목조건축의 활성화	김정재, 송석준, 위성곤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위기의 민주공화국: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고영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4강	최기상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과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방안 세미나	안병길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페로브스카이트 차세대 태양전지 초격차기술 확보	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지정감사제도 4년, 기업 현장의 명암	최승재 의원실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4.28(금)	자율안전관리 기반의 중대재해 예방 방안: 세계산재노동자추모 기념 국제세미나	전해철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김예지, 윤재옥, 박대출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중증·희귀질환 신속등재·치료환경 얼마나 개선되었나: 희귀질환 신약 접근성의 실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	강선우 의원실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공단지 혁신방안	홍문표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윤희인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5.1(월)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꿀벌집단 폐사’ 대책 국회토론회	여기구, 이원택, 정희용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023 박물관·미술관 발전 정책세미나	이상민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MBC의 현재와 개혁방안 세미나	박성중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5.2(화)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기후적응 법제 강화 방향과 과제	임이자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경기 지역 여야 의원 49명	국회도서관 강당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김태년, 고용진, 김경만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윤석열 정부 1년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신원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먹거리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소병훈, 김승남, 서삼석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	남인순, 한정애, 진성준, 이수진(비), 전용기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디지털시대의 웹툰제작과 기술 포럼	김승수, 김영식, 박영순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	박성민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효율적 항만보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간담회	여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JMS 현황보고 및 변호인접견권 남용 방지 제도	박범계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5.3(수)	초고령화 시대, 간병 파산 간병 문제 해법을 모색한다	정춘숙, 김민석, 고영인, 강은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토론회	신정훈, 위성곤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대학 천원의 아침밥 전국 확대 방안	안민석, 조경태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빌라밀집지역에 필요한 혁신방안은 무엇인가?	소병훈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제2회 해킹보안세미나 "대한민국을 방어하라"	이상민, 서병수 의원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한·일관계 정상화와 대한민국 안보위기 대응 방안	정경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지방 대학살리기 정책세미나	이명수, 최형두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국회세미나	진선미, 강병원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초기업)교섭 활성화 방안	이은주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서초포럼 한국노벨과학포럼 공동 학술대회: 한국 양자 기술 현황과 지원 정책	박성중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5.4(목)	장례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고영인, 신현영 의원실,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원택, 이개호, 서삼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생존과 공존 '오늘의 우리'가, '내일의 우리'를 위해	고민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광양항 발전 토론회	서동용 의원실	여수광양항만공사 2층 국제회의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	진성준, 전해철, 서영교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이인선, 윤창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한국웹3.0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염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글로벌 SMR 파운드리(Foundry) 구축을 위한 토론회	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2023 더민주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 3회차, 노동·복지·교육	더민주(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한국OTT포럼 특별세미나	변재일, 김윤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5.8(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성공전략: 2023년 제4차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	이달곤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윤석열정부 농업정책 1년, 기대와 좌절을 말한다	윤미향, 소병훈, 이개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인공지능(AI)이 말을 걸다, 디지털 대전환(DX)과 초거대 AI의 현주소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 '국가폭력범죄의 공식시효 배제 입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인재근, 기동민, 진성준 의원실, 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위원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2023 더민주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 4회차, 경제·민생·환경 기후변화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윤영덕 의원실, 더민주(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5.9(화)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국회사무처, 국회미래연구원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넷플릭스 한국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	김윤덕, 이상현, 임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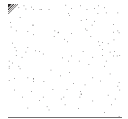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5.9(화)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구제를 위한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	김한정, 김종민, 박성준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정춘숙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부동산 악법 토지거래 허가제 OUT	태영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동서3축(성주-대구간)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희용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후쿠시마 어민초청) 방사능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를 위한 한-일간 연대방안 모색 토론회	강은미, 배진교 의원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 TF	국회 본관 316-2호
	2023년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비전선포식: 당신의 잠재력을 펼쳐라!	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MBC 방송문화진흥원 문제점과 대안 모색	홍석준, 권성동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정책대안: 빈곤아동 정책 자문위원회 1차 토론회	김영주 의원실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수륙양용자동차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조용천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우주 인력 양성 정책 토론회	조승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5.10(수)	한-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 발전 방안 모색 간담회	이용빈, 김병욱, 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306호
	양곡관리법 개정과 한국농업의 미래	이달곤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경제는 민주당!: 제7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봄을 찾기: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포럼	조은희, 윤영덕, 조오섭, 강은미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운전자님, 전방에 아이가 있어요: 첨단통신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망 강화 정책 토론회	박완주, 유의동, 이태규, 문진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해양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23년 국회 정책세미나	송갑석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여행, 힐링이 되다: K-웰니스, 국가전략산업으로	배현진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한국사회의 해외입양 왜곡된 인식 너머의 진실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2023 FORUM 한국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	한정애, 강기운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북핵 대응과 국방혁신의 합치: 북핵대응 안보 세미나	한기호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5.11(목)	Chat GPT시대 대응과 과제 좌담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의원회관 306호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연구개발 체계 혁신: 2023년 제2회 국회 정책 토론회	조승래,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김영주 국회부의장 긴급현안 토론회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 상법, 무엇이 문제인가	권철승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2023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서동용, 강민정, 민형배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건설산업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3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도서관 강당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방안 토론회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옥외광고물법 제도개선 과제 및 활성화 방안 공청회	이해식, 조용천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 2023년 한국부동산법학회 춘계학술대회	김희국, 김민철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위한 의회네트워크 서울 컨퍼런스	홍익표 의원실	국회 사랑재
5.12(금)	유아교육·보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정경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융합 활동 제안: 제14회 환경생태기상 ICT융합포럼 세미나	이인영 의원실, 국회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5.15(월)	'가르칠 수 있는 옹기 교실회복을 위한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약자의눈'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현행 반부패 정책의 의미와 향후 과제	송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먹거리기본법 제정 국회토론회	민형배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충남 수소융복합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이명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윤희인, 강민정, 김한규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한글창제 580주년 한글쓰기 문제 관련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김용판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국방과학기술의 활용과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방안: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관리에 관한 정책 세미나'	임병헌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	이은주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지방분권,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토론회	송재호, 김한규, 위성곤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시장의 실패, 정부실패 그리고 정부규제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5.16(화)	농업의 핵심인력 여성농업인의 건강행복권을 높이자	정희용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한국판 DSA 입법 토론회	정필모, 윤영찬, 이정문, 박완주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	윤희인, 이탄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평화해법 모색 국제 컨퍼런스: 신냉전 불러올 한미일 군사동맹 이대로 좋은가?	강은미, 배진교 의원실	국회본관 316-2호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녹색 철강 전환 정책토론회	국회철강포럼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023 수산혁신포럼	주철현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강중국가(強中國家) 진입의 비전과 과제	조웅천, 조승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건성안 환자의 점안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	백종현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에 바란다: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정경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 긴급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5.17(수)	후쿠시마 방류에 대처하는 우리의 과제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현황 간담회	전봉민 의원실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강화 전략 세미나	하영제, 이현승, 윤영석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강원도 미래산업 고도화 방안과 규제 해결책을 위한 입법토론회	송기현 의원실, 국회 법제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언어재활사 자격신고제 및 실습인증제 법제화를 위한 국회공청회	정춘숙, 이태규, 강훈식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윤희인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	박성민, 문진석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청소년 자살률 대응, 청소년자기주도활동 바꾸쳐 도입 방안 모색	김경만, 유정주, 장경태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 가정법원 확대, 재판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이장섭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NFT 시장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김희곤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5.18(목)	나이드는 한국, 노부모 돌봄 중장년 가족지원: 노부모 돌봄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은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 국회 토론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대학의 미래와 고등교육 정책 방향 현 정부 대학정책의 검토와 대안	도종환, 안민석, 강민정, 민형배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출근해야 좋은 직원인가?: 연속세미나 제2차	정경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5.19(금)	'차세대재외동포' 정책과 과제: 제8회 재외동포정책포럼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발전 확대: 금융활성화 방안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전환포럼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GhatGPT와 생성형AI의 윤리적 이슈와 해결 방안	송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 없는 사회를 위하여	서정숙, 김승수, 이종성, 황보승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고령화시대 노후 준비, 이대로 좋은가?	류성걸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부동산 STO 규제와 발전 방안	조명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당뇨병 공발병 및 만성콩팥병의 국가 중점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강선우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원 정책자료'(<https://ampos.nanet.go.kr:7443/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색조팝나무

연분홍색의 귀여운 꽃들이 가지에 다글다글 달려있는 이 꽃나무는 삼색조팝나무로, 국회소통관 앞마당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팝나무 중 하나인 삼색조팝은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로 5월 말 경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삼색조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잎의 색깔이 계절에 따라 세 번 변해서입니다. 새로 나온 잎은 연두색, 붉은색을 띠고 여름에는 노란빛이 도는 녹색이다가 가을에는 단풍처럼 붉게 물이 든다고 합니다. 삼색조팝나무의 꽃말은 ‘노련함’입니다.

조팝이라는 이름은 좁쌀이 가지에 붙어있는 모습 같다고 하여 불리는데 비슷한 이름인 이팝나무는 쌀밥을 닮았다 해서 그렇게 불립니다. 조팝꽃은 작고 둥글며 이팝꽃은 다소 길쭉합니다. 🍵

글 고영선 사진 김진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해 손잡은 여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토론회

경기도 국회의원 49명과 경기도는 5월 2일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주최 의원은 강득구, 고영인, 권칠승, 김경협, 김남국, 김민기, 김민철, 김병욱(분당을), 김상희, 김성원, 김승원, 김영진, 김용민,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문정복, 민병덕, 박광온, 박정, 백혜련, 서영석, 설훈, 소병훈, 송옥주, 심상정, 안민석, 양기대, 오영환, 윤영찬, 윤호중,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이재정, 이탄희, 이학영, 임오경, 임종성, 전해철, 정성호, 정춘숙, 조웅천, 조정식, 최종윤, 최춘식, 한준호, 홍기원, 홍정민 의원(가나다순)이다.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0년 경기북부의 시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천492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경기북부 지역이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를 비롯해 이중 삼중 중첩된 규제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경기북부 지역만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 이곳은 남북교류와 통일시대의 거점이며 생태의 보고이기도 하다. 제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거의 모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풍부한 발전 가능성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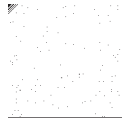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인구 1천400만 명 가운데 경기북부 인구만 360만 명으로, 분도가 되어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지

방자치단체”라며 “접경 지역인 경기북부는 산업 발전이 더디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남부 지역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기북부가 가진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경기북부뿐 아니라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각각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 ‘경기북부의 산업 개편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영수 산업연구원 박사, 김현수 단국대 교수, 소성규 대전대 교수,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경기북부, 남북 협력과 통합의 중추 거점

첫 번째 발제자인 이정훈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의 낙후된 상황을 지적하면서도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경기북부는) 인구는 360만 명이지만 좋은 일자리가 없고 코스피 2000, 코스닥 150에 드는 기업 본사도 없다”며 “분단, 규제, 지원 배제의 3중고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북부는 지정학적으로도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5월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경기도지사가 카드섹션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북협력과 통합의 중추 거점”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 자체만의 이슈가 아니라 중기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장기비전으로는 미래 한반도 통합 거점을 조성, ‘국제평화자유도시’로 진화할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영성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입지 중심축이 경부축에서 충청권으로 이동했듯이 산업입지 지형도는 변화한다”며 “지식집약산업 시대에는 자본집약산업을 책임질 충청권과 함께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활용 가능한 토지를 보유한 경기북부에 기술집약산업의 중심지 역할이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소성규 교수는 경기북부지역특별자치도 명칭 사용,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추진지원단 설립 등을 제안했다. 김현수 교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 교통네트워크 연결, 수도권 경계 재설정, 거점연계형 지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등의 안을 제시

했다.

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정 능력이 충분해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경기도가 둘로 쪼개지면 총량이 정해진 교부세를 다른 지자체와 나눠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반발이 예상된다.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은 “경기도가 워낙 비대하고 분도로 인해 서울이나 경기 남부 인구의 분산 효과도 기대되는 등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양이 줄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득해 나가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강원과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며 “경기북부는 먼저 산업력을 키우는 것에 주력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 요인들이 특별자치도로의 승격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글 박민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으로 재외동포정책의 근간을 세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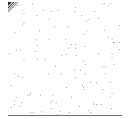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인 연유로 세계 193개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의 재외동포는 약 750만 명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조제2항은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으로 재외동포의 권익보호 등 관련 정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한 제도가 정비되었다. 연혁적으로 제5공화국 시기에 교민청 설치 논의가 있었고,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랑스런 한민족 시대’를 선언한 후 이른바 ‘신교포정책’을 발표했다. 1997년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재단이 설립된 후 관련 후속 법률이 제정되면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시행함에 따라 부처 간 업무의 중복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기존 재외동포관련 법률은 ‘고려인동포법’, ‘재외국민등록법’, ‘영사조력법’, ‘해외이주법’, ‘여권법’과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국민교육법’ 등이 있다.

한편, 재외동포청 설치에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이었다. 그간 몇 차례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끝에 금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조기열 수석전문위원
외교통일위원회

1997년 10월 제정구 의원 등 25인이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발의한 이래 총 10건의 동일제명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동 법안이 혈통주의에 기반하여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정부측의 반대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었다. 종전의 법률체계로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내와 거주국에서의 권익 증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노정된 바, 정책의 기본목표 등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각 부처 소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 법률과의 법체계상 중복,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관계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15대국회부터 제20대국회까지 제18대국회를 제외하고 매 국회기 마다 발의된 법률안은 모두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이후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외교부와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었고, 4차례의 심도있는 외교통일위원회의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재외동포기본법안’ 대안이 마련되었다. 이번 제정안은 전해철 의원, 안민석 의원, 김석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2023년 4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9일 공포되어 1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일부 규정은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추어 6월 5일 시행된다.

법률의 주요내용 및 향후 정책과제

‘재외동포기본법’은 16개 조문의 본칙과 4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의 목적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제1조). 둘째,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괄하는데, 전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장기체류자와 외국영주권자를 의미하고, 후자는 출생에 의한 대한민국 과거국적자 또는 그 직계비속인 외국국적자 등을 지칭한다(제2조). 셋째,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별 지역별 특성 및 연령에 걸맞은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 넷째,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의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제7조,

제8조). 다섯째, 재외동포 사무가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재외동포청 신설 이후에도 외교부가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었다(제10조). 여섯째, 재외동포 대상 초청·연수·교류 지원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국가기관이 수행하기 곤란한 외국국적동포 사무와 관련된 외교적 갈등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 형태의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명시하였다(제11조).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재단법’이 폐지되므로 동 재단 직원들의 고용안정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재단직원중 일부는 경력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 재외동포청에 근무하고, 일부는 재외동포협력센터에 근무하되 초과 현원이 발생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별도 정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였다(부칙 제4조).

이번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재외동포청 신설을 통하여 관계 부처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외교부 장관이 재외동포정책위원장으로 관련 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본법은 재외동포 관련 법률을 모두 아우르는 모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법률 제6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부처 간 갈등의 여지가 상존하므로 향후 관련 법률의 지속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이번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가 동반 성장하고, 재외동포정책이 거주국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한미동맹 70주년 성과와 한미의회협력 강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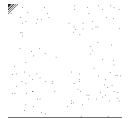
김경신

국회 워싱턴 주재관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양국관계는 상당한 변화와 발전, 그리고 성과를 경험했다. 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왔고, 한미FTA 등 경제 관계를 통해 상호 번영과 성장을 촉진시켰다. 또한 양국은 상호간 민주적 가치·인권·법치를 수호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문화교류 및 인적유대로 상호 이해와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 각 부처, 국회, 기업, 민간단체, 일반국민 그리고 미주 각 지역에 분포하는 한인 등 각계각층이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다면적 파트너십의 토대 위에 이루어진 것이다.

한미 의회 간 협력의 중요성

다양한 파트너십 중에서도 최근 의회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같이 한국의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국내외 정책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에 미치는 미 의회의 영향력이 크지만, 우리의 미국 의회에 대한 이해와 외교적 스킨십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118대 의회에서 민주 공화 양당은 인권, 불공정무역,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력 확장, 사이버 스파이 등 다양한 문제에서 중국에 공동으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도 상당수 발의하고 있다. 미 의회는 배타적인 입법권, 지갑의 힘인 예산편성승인권, 강력한 소환권을 갖는 청문회 등을 통해 행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지금처럼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의회 다수당(하원)의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 더욱 뚜렷하다. 치열해지는 미중갈등 국면에서 동맹국인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지정학적 의존도 사이에서 우리의 갈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 의회 동향을 살피면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점을 찾아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회 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

1) 모니터링 강화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양성

미 의회의 예정된 법안, 청문회 또는 정책 토론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를 식별하고, 관련 위원회 등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도전 과제나 기회를 조기에 파악해, 정책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거나, 의회간 접촉 등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부 등에서 적기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 간 개인적인 관계와 신뢰가 전제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지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나, 장기적으로는 양국 의회를 이해하는 전문가를 국회 고유 자산으로 양성할 필요도 있다.

2) 의회교류 단체 지지와 지한파 의원 교류 확대

미 상하원의 코리아 코커스, 코리아 스터디 그룹을 비롯해 한미 의회 교류(IPE) 등은 한반도의 정치, 경제, 안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국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이해를 높이는 플랫폼의 기능을 해왔다. 동 단체를 통한 의원 간 초청·방문뿐만 아니라 소속 스태프간의 교류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양국 의회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크다. 또한, 이러한 단체에 속하지 않더라도 한국기업의 투자지역에 기반한 의원실과의 교류 확대 등 지한파·친한파 의회인사를 발굴하고 유대

를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3) 보편적 가치에 중점을 둔 의회단체간 교류 활성화

코커스 등 지역기반의 의회단체 외에 특정 어젠다 중심의 교류도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신뢰의 기반을 쌓아 가는데 중요하다. IRA 등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 과거부터 미 의회를 포함한 미국 정치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인류가 당면한 기후환경, 인구문제 등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 양자간 논의와 교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 의회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이며 주요 파트너로 한국의회 주요인사를 초청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제에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상임위원회 및 의회 싱크탱크 교류

한미 양국 의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통점이 있는바, 상임위원회 의원 및 스태프 간 교류를 통해 각 위원회 별로 공통의 어젠다에 대한 모범 사례, 교훈, 문제해결 접근방식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것도 양국 의회 협력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CRS(미 의회조사국) 등 싱크탱크의 한반도 관련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지원한다면, 이를 통해 미 의회 등 정가에서 한국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한미의회협력 지원기구 설치 필요

오스트리아, EU는 워싱턴에 의회 리아중(연사수행)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미 의회의 모니터링과 보고, 위원회 및 의회 기구와의 전략적 연계, 의회 인사 간 방문·초청 등의 지원, 세미나·포럼 등의 기획과 집행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한미 양국 의회 간 협력을 지원하고 이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이달의 청원

국회청원은 청원인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청원을 홍보할 수 있도록 4월 17일부터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시할 청원 홍보 영상의 접수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3건의 청원인 홍보동영상이 게시됐다.

제21대국회가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청원은 총 130건으로 의원소개청원이 68건이고, 국민동의청원이 62건이었다. 이 중 지난 한 달 동안(4월 20일~5월 17일) 접수된 청원은 모두 7건(의원소개청원 3건, 국민동의청원 4건)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동의청원인 ‘한전은 공기업, 송전시장 민영화 반대’에 관한 청원’은 공기업인 한전을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 기업의 이익을 내기 위해 전기요금을 계속 올릴 것이고 과다한 요금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며 정부의 관리가 어렵게 될 것이므로 공기업인 한전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20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하여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됐다.

다음으로, 의원소개청원인 ‘대규모 비영리체육시설에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체육시설법에 관한 청원’은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등 비영리 체육시설에도 안전·위생기준을 적용하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27일 김예지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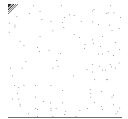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인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선에 관한 청원’은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지역별·건설사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집단대출이어서 금리비교의 선택권도 없이 중도금 대출을 떠안아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부당하므로 높은 금리로 차등 적용되는 가산금리의 합리적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27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해 같은 날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인 ‘아동학대살인 가해자의 엄벌과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은 아동학대살인에 대해서 형량의 감경처분을 없애고 강하게 처벌하며, 새로운 아동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그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입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4월 27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인 ‘AI 이미지 생성기의 무분별한 사용과 악용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에 관한 청원’은 AI 이미지 생성기가 새로운 혁신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 허위 뉴스 및 사기·사칭에의 악용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와 윤리지침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1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해 같은 날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의원소개청원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입법 등에 관한 청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 및 특례규정을 마련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요청하면서, 동 법안 중 군사규제 완화에 관한 규정이 반영되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계획’에 2개 시군에 걸치는 광역시설의 설치 등 광역적 발전계획이 필요하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2일 송기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돼 같은 날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마지막으로, 국민동의청원인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 등에 관한 청원’은

강원 고성과 속초 지역주민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군사규제로 오랜 시간 동안 재산권 침해, 지역발전 저해, 인구감소 등의 고통을 받고 있어 관련 법령 제·개정과 예산·정책적인 해결조치를 통해 민생현안을 해결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송기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돼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5월 2일 회부됐다.

접수된 청원의 원문 및 위원회 심사정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청원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정리 국회민원지원센터

청원제목	청원자(소개의원)	소관위	접수일	구분
한전은 공기업, 송전시장 민영화 반대에 관한 청원	이미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4.20.	국민동의청원
대규모 비영리체육시설에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체육시설법에 관한 청원	유아영(김예지 의원)	문화체육관광위	4.27.	의원소개청원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에 관한 청원	이수명	정무위	4.27.	국민동의청원
아동학대살인 가해자의 엄벌과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최재형	법제사법위	4.27.	국민동의청원
AI 이미지 생성기의 무분별한 사용과 악용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에 관한 청원	안성현	문화체육관광위	5.1.	국민동의청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입법 등에 관한 청원	박상진(송기헌 의원)	행정안전위	5.2.	의원소개청원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 등에 관한 청원	박상진(송기헌 의원)	국방위	5.2.	의원소개청원

* 국민동의청원 홍보영상 제출 목록

청원제목	청원자	청원공개일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	박○○	3. 29.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 (*청원 5만 명 동의 달성 및 성립: 4. 19.)	표예림	4. 10.
14만 파킨슨 환우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무리한 약가 인하정책에 관한 청원	김○○	4.17.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국회 MWC 2023’ 등 개최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벨기에·독일 등
방문해 엑스포 유치 활동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호)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유럽 내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이 상주하는 벨기에와 독일을 방문해 유치교섭 활동을 벌였다.

이번 방문에는 김영배 간사(더불어민주당)·이용우 위원(더불어민주당)·전봉민 위원(국민의힘) 등 위원 3명이 참여해 5개국의 BIE 관련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 5월 2일 사모아의 피오나 르네 사모아 BIE 대표, 동티모르의 호르헤 카몽이스 BIE 대표와 만난 데 이어 3일 가이아나의 리든 찰스 공관 차석, 4일 말라위의 데렉 라쿠드잘라 차석대사와 레소토의 바바라 마수파 BIE 대표 등과 만나 면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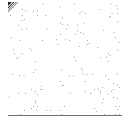
위원들은 또 5월 5일 제834회 함부르크 개항행사에 국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행사의 주빈도시로 선정된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에 대해 홍보하고, 행사에 참석한 다양한 참여자들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을 강조하고 박람회 유치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 밖에도 5월 1일 벨기에 진출기관, 4일 독일 진출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벨기에 및 독일 내 진출기관·기업들의 엑스포 유치 및 홍보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현지의 엑스포 유치 분위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 위원들은 벨기에에서 한-EU 수교기념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하고 독일 내 아데나워 정당 재단 및 베를린 자유대학을 방문해 독일 내 정당제도 및 교육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첨단전략산업특위,
반도체 산업 현장 방문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동)는 5월 3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성남시 제2관교에 위치한 텔레칩스 본사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특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중견 시스



템 반도체 설계전문 기업인 텔레칩스를 방문해 업계 현황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방문에는 유의동 위원장과 홍기원·김성원 간사를 비롯해 여야 소속 위원 8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도착 후 삼성전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첨단기술 유출의 처벌 강화 및 정부·지자체 주도의 반도체 인프라 건설 등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반도체 생산라인을 시찰했다. 이어 텔레칩스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 동향과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인력 부족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시스템 반도체 수출 증대, R&D 투자세액공제 등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시스템 반도체활용 데모 시현을 살펴보기도 했다.

유의동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수출 부진과 미국 등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 보호 추세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규제 완화, 첨단기술 유출 방지대책 마련 등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회 MWC 2023’ 개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5월 15일부터 이틀간 ‘국회 MWC 2023’을 개최했다. ‘ICT 신기술의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3(Mobile World Congress 2023)에 참가한 국내 기업의 최신 제품 및 혁신 기술을 우리나라 국민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15일 열린 개회식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정청래 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에도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와 정부 인사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식에서 “최근 ICT 수출이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ICT 산업환경이 격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국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총력 대응해 이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창의성과 기술력을 갖춘 국내 스타트업을 정부가 지원

해준다면 이들이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이 있지만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해 아이디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ICT 기술 및 혁신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국회 MWC 2023 참여 기업 전시회’는 5월 15일 오전 11시부터 16일 오후 3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에는 삼성전자, SKT, KT 등 대기업과 쏘리드, 이노와이어리스, 센서뷰, 이랑텍 등 중소·중견기업이 최신 기술의 제품들을 선보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 MWC 2023 참여 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소·중견 ICT 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규모 주문을 받아도 부품 대금 납부 시점과 제품 대금 결제 시점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오더(Order)의 저주’를 1조 4천억 원의 정부 조성 벤처펀드를 활용해 해결하겠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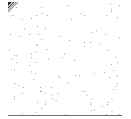
15일 같은 시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크 앤 퓨처 인사이트 콘서트(Tech & Future Insight Concert)’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대 전자제품 박람회 MWC(Mobile World Congress)와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의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논의했다.

정무위,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 의결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5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해당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위반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입법자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의구심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의 가상자



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진 신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한 조사 제안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필요한 자료·활동에 대해 협력 촉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앞서 정무위는 5월 11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법안은 우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어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고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위, 고위공직자의 가상
자산 재산등록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장제원)는 5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에는 가상자산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안전위는 이날 개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국회의원에 한해 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도록 하는 부칙을 법안에 추가할지를 논의했지만, 국민 여론에 따른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후 관련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했다. 🍵

NEWS

김진표 국회의장, 피비르 헝가리 국회의장과 회담



김진표 국회의장은 5월 9일 의장접견실에서 피비르 라슬로 헝가리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교류 강화 및 유학 프로그램 등 인적 교류 확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을 논의했다. 김진표 의장은 “헝가리는 1989년 옛 동구권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와 수교한 나라로, 당시 우리 북방외교를 상징하는 외교적 의미가 큰 나라”라며 “4년 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비극적인 선박 사고가 발생해 양국 국민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으나, 당시 헝가리 정부가 사고 수습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2021년 추모공간을 건립해줘 한국 국회를 대표해 감사드린다. 또한 헝가리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의사를 표명해 한국의 부산 유치 노력에 큰 힘이 되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양국 간 교역이 지속 증가해왔고, 특히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2019~2022년 대(對) 헝가리 투자 1위국으로 부상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삼성SDI의 헝가리 투자 관련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도록 지원해준 헝가리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피비르 의장은 이에 “한국 기업의 투자는 헝가리에 매우 큰 도움

이 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한국의 이런 투자가 유럽의 규칙에 부합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며, 경제교류는 양국 관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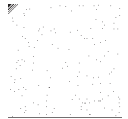
김진표 국회의장, 카스트로 엘살바도르 국회의장과 회담



김진표 국회의장은 5월 8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카스트로 엘살바도르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카스트로 의장의 방한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 초청에 따른 것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인 엘살바도르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고 양국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우호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의장은 “지난해 엘살바도르 국회에서 수교 60주년(1962년 수교) 축하 성명안을 발표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한국은 SICA 등 중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는데, 우리 주요 협력 파트너이자 올해 하반기 SICA 의장국인 엘살바도르 카스트로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제 및 개발협력과 관련, “2021년 한-중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이 확대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섬유·의류 사업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기업과 동포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엘살바도르 의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한국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민관이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가 직면한 보건 위기, 첨단기술 양극화, 기후변화 등 도전과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발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할 계획”이라며 엘살바도르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카스트로 의장은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며 “60년간 이어온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고 한국 측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 ‘제33차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이 5월 1일부터 3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33차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의회 대표단이 참여하는 회의로,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다. 지난 2월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약 두 달 만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의회 대표단이 다시 모

였다.

‘제33차 한·미·일 의원회의’는 대표단장인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 의원·강선우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빌 해거티·크리스 밴 홀른 상원의원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이노구치 쿠니코 참의원(대표단장)과 나카가와 마사하루·오카모토 미츠나리 중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한·미·일 의원회의’는 의원회의, 미 의회조사국(CRS) 전문가 간담회, 미 싱크탱크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아시아 지역 관련 고위급 인사 면담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결과와 한일 관계 개선 방향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공유하고, 역내 안정을 위해 삼국 의회 차원의 안보·경제협력과 정보교류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대화를 통한 위기 해결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 국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미·일 대표단에 전달했다.

아울러, 한·일 대표단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방문해 추모대에서 함께 묵념하고 2022년 준공된 추모의 벽에 헌화하며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겼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삼국 의원 간 솔직한 정치적 견해 공유를 위해 회의 결과나 발언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대한민국국회는 앞으로도 역내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의원회의의 참석을 통해 삼국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414차 민방위의 날 전 직원 민방공 대피훈련

국회사무처는 5월 16일 제414차 민방위의 날 전 직원 민방공 대

NEWS



피 훈련을 실시했다.

대피훈련은 공습경보에 따라 이광재 국회의사무총장을 포함해 전 직원이 지하 대피소로 이동을 하고, 이후 비상 시 직원 행동요령 교육과 심폐소생술 및 AED(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실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광재 국회의사무총장은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실시되는 이번 공습대피 훈련을 계기로 비상시 국회 직원들의 신속한 대피절차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하기 바란다”며 “비상사태 뿐만 아니라 테러, 재난 상황에 대비해 초기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광재 사무총장은 영등포 소방서 교육훈련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직원들과 함께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을 직접 실습하면서 정확한 자세를 익힐 것을 강조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훈련에 대비해 민방공 경보 발령, 테러 및 재난 발생 시 ‘국회직원 행동 매뉴얼’을 제작해 배부하고 국회 전자 게시판에 관련 자료를 게시해 직원들이 참고하도록 했으며 민방공 자동 경보수신 및 전달 시스템을 전면 보완했다.

국회도서관, ‘제21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개최

한국학술정보협의회(회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는 5월 25~26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특례시에서 이동한 고양특례시장과 남영



준 한국도서관협회장, 한국학술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대표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올해로 출범 21주년을 맞이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 협의체인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2023년 5월 기준 총 6천395개 회원기관(대학도서관 429개, 전문도서관 927개, 공공도서관 762개, 학교도서관 4천146개, 특수도서관 131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를 개최해 최신 정보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도서관 및 지식정보계의 현안과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초거대 인공지능(AI)의 출현에 따라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한국학술정보협의회가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도서관, 미래지식정보기관의 역할과 상호협력에 대해 보다 풍부한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협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기관들에게는 국회의장상 등이 시상됐다.

특히 이번 개회식에서는 한국학술정보협의회가 전국의 공공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도서관과의 협정을 확대해 지식공유·확산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는 ‘전국민 지식연결망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는 그동안 연계·확장을 통해 구축해 온 국가적 데이터 자산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공유 체계 구축의 의지를 담고 있다.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도서관-데이터-플랫폼의 연결’이라는 주제 아래, 25일에는 박희준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의 기조 강연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노베이션하라’를 시작으로 △미래도서관 서비스, △디지털 저작권, △데이터 활용 등 3개 주제의 분과 세미나를 진행했다. 26일에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신용녀 상무가 ‘생성형AI를 통한 New Digital Experience’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신 인공지능 기술 동향과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밖에 부대행사로는 도서관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전시 부스와 포스터 세션을 운영해, 행사 관련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국학술정보협회회장인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에 적극 도입하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도서관으로서 국가지식정보의 플랫폼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학술정보협회가 지식의 공유·확산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전국민 지식연결망 구축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조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4월 24일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대한 안내서인 ‘2023 대한민국 조세’를 발간했다.

조세는 국가재정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정책적 수단으로도 활용됨에 따라 국민 경제에 큰 영

향을 미친다.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조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 과정에 걸쳐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될 필요

가 있다.

이번에 발간한 ‘2023 대한민국 조세’는 조세의 일반론,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와 세입구조,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우리나라 조세의 해설서로서 정책과정 참여자 및 일반 국민의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발간된 보고서다. 특히 올해 발간한 ‘2023 대한민국 조세’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시대별 변화와 최근 국내의 동향을 추가해 우리나라 조세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동 보고서는 총 5부로 구성됐다. 먼저 제1부 조세의 이해는 조세의 개념 및 기능과 같은 일반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시대별 변천을 수록하여 과거 조세정책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조세정책에 대한 함의를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2부에서는 조세의 성립과정과 조세법의 규범체계를 정리했고, 제3부 국세 및 제4부 지방세는 각 세목별 과세요건 뿐 아니라 세목별 주요 개정연혁과 국제적 동향, 2023년 시행되는 세법개정 사항 등을 수록해 조세제도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도모했다. 끝으로 제5부 조세지출은 우리나라 국세 및 지방세 조세지출 현황과 조세지출 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정책대안’ 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5월 9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실이 한부모가족의 날(5월 10일)을 맞아 주최한 ‘한부모가족 빈곤 실태와 정책대안’ 국회 토론회를 국회미래연구원과 함께 공동주관했다.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 아동빈곤율은 47.7%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이며, 한부모가족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은 덴마크와 비교할 때 무려 38%p나 높다.

NEWS



토론회는 아동빈곤은 결국 아동의 양육환경에 기인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아동빈곤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로 논의했다.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박사의 '정치가 빈곤아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장을 역임한 송다영 인천대 교수의 '한부모가족 아동의 빈곤실태'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전문가 6명이 심도 있는 발제를 이어갔다. 후원기관인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관계자 및 당사자들의 질의 응답 역시 토론회의 열기를 더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축사에서 "한부모가족 아동들이 크고 넓은 세상 속에서 마음껏 성장하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삶의 여건을 마련해 나아가는 그 여정에 동행하고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주 부의장은 아동빈곤 해소를 위해 설치된 부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빈곤아동 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빈곤아동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성황리 개최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은 5월 9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서 교육의 핵심은 창의성과 다양성 향상에 있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며, "지식교육은 인공지능에 맡기고 교사는 학생의 진로 적성에 집중해야 공교육이 발전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축하 인사에서 "인공지능 인재 100만 명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에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외에 설훈, 이원욱, 전해숙, 이태규, 최형두, 양향자, 허영, 정필모,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속기관에서는 이광재 국회의원사무총장, 박장호 국회입법처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해 개최한 이번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토론회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우리 삶의 친절한 **법률 길잡이!** 말랑말랑한 **법 토크!**



우리들의 법

수요일 밤 10시



고정패널
유재환 (방송인)

MC 김일중
(前 SBS 아나운서)

고정패널
임주혜 (변호사)

국회방송  NATV
www.natv.go.kr

70년 만에 봉사단체서 ‘법정단체’로 거듭난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3. 4. 2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의 시행으로 자율방범대가 한정된 경찰 인력을 보완하는 치안 파트너로 활동을 시작했다. 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함께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준법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거 중립, 영리 행위 금지 등 책임을 부여받았다. 이전과 달리 지자체별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자율방범대법’의 내용과 보완점을 알아보았다.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또는 지구대·파출소 단위로 조직돼 대원 3~5명이 한 조를 이루거나 경찰과 합동으로 범죄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생업과 병행해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전국 약 9만여 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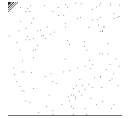
자율방범대는 1953년 휴전 이후 증가하는 범죄에 경찰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워 동·리 단위로 구성된 ‘주민야경제도’가 출발점이다. 현재 서울에만 4천500개 조직 1만여 명이 범죄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70년 만에 법률에 근거한 단체로 정비됐다. ‘자율방범대법’은

2022년 4월 26일 제정되고 2023년 4월 27일 시행됐다.

‘자율방범대법’ 제정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 정종학 입법조사관은 “자율방범대의 조직·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범죄 예방·청소년 선도 등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치안유지가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기본 단위를 ‘읍·면·동’으로 하여 단체를 설립할 때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활동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단체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그 활동과 지원을 법률에서 보장받는 법정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자율방범대에 소속된 대원들은 경찰과 함께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준법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거 중립, 영리 행위 금지 등 책임을 부여받게 됐다. 무엇보다 지역 곳곳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한정된 경찰 인력을 보완하는 치안 동반자로서 순찰 활동 지원 등 지역 안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찰청은 4월 27일 ‘자율방법대법’ 시행을 맞아 경찰청 대강당에서 자율방법중앙회·연합회·연합대 등과 함께 ‘자율방법대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 출범 기념식에서는 자율방법대의 활동성과와 법 제정 경과 등을 공유하고, 새로 발대한 자율방법중앙회에 경찰청장 신고증을 수여했다.

출범 기념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방법대는 주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공동체 치안의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지역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구현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념식에 참석한 서천열 자율방법중앙회장은 “자율방법대법 제정으로 그동안의 자율방법대 활동이 지역 안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은 것 같아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자율방법대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재해 보상, 수당 지급 등 과제

하지만 자율방법대에 대한 처우 및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다. 이번 법 시행은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 온 자율방법대에 지속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법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예산 지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 자율방법대간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만큼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갖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치 조직화 및 선거 등에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유흥가에서 마포경찰서 관계자 및 마포구 자율방법연합대 관계자 등이 마약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같은 법에서 ‘자율방법대·중앙회 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또한 현재 1개 읍·면·동에 2개 이상의 자율방법대가 설치·구성된 경우가 있어 법 시행 이후 자율방법대 조직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지역주민이 자율방법 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그에 대한 재해보상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점도 향후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통상적인 지역순찰의 업무 외 시·도경찰청 등이나 지방자치단체 요청 수행 시 추가 수당 지급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율방법대는 협력치안의 대표 사례로 자율방법대원의 노하우를 잘 활용해 시민들이 신뢰하는 안전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나가도록 더 노력하겠다. 직무 교육 및 장비·복장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자율방법대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 고영선



국회 본회의, 법률안 113건 의결

국회는 4월 27일 본회의(제405회<임시회> 제5차)를 열고 법률안 22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택을 경·공매로 매각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 인증제도를 도입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어 국회는 5월 25일 본회의(제406회<임시회> 제1차)를 열고 법률안 91건을 포함한 총 9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최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의결됐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해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해당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공매절차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 법정기일이 늦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우선징수 순서에 대신해 변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또, 이러한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후 5년 동안 감정평가법인이 사무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게 해 부동산범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은 재외동포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 및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법은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 유대감 강화, 재외동포의 인적 자원 개발 지원 등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재외동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어 외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재외동포정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한편, 제정법은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대한민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원



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초청·연수·교육·문화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립,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게 하고 센터는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우선, 개정법은 '실외이동로봇'을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으로 정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에서의 운행을 위해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장관이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자는 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관은 안전인증된 사항에 대해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등이 지능형 로봇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이 삭제돼 영구법으로 전환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해 재난 또는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등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기관이 재난 대응 관련 업무 수행에서 수집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개정법은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인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신기술 발달을 군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신속소요'를 결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무기 도입 절차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합동참모의장은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의 소요(所要)를 결정한 후 방위사업청장은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법은 방위사업청장 등이 신기술의 활용을 위해 소요 등이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치지 않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할 때 공무원·직원 및 전문가로 구

성된 성능인증시험팀에 의한 성능인증시험 결과로 시험 평가를 대체해 신기술이 반영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합참의장이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연구개발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자금의 송금·이체가 이뤄지지 않는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피싱 피해자도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개정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교부받은 자금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은 ‘문화재’ 용어를 대체하는 ‘국가유산’ 용어를 도입하고,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나누어 각각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법은 국가유산의 가치보존 등 법률의 기본이념, 국가유산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가유산의 지정·등록,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관리 등을 규정했다.

특히 제정법은 국가유산을 수리할 경우 전통적 재료

와 기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협력의 주체를 문화재청장에서 국가로 상향 규정했다. 또한, 문화재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을 설립하고 공연·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을 포함해 국가유산의 보존·활용·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등의 자격, 업무, 단체 관련 내용을 독자적으로 규정했다. 국가 및 지자체가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간호사 등이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제정법은 간호사 등에 대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의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제정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들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등을 사용해 발생한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하고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등 업무수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위반 법령에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했고,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사라지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게 하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결격사유가 원인이 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같은 사유로 재차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다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퇴거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장관의 조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으로 확인되면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정법은 경매절차를 유예·정지하고,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주택의 매각을 유예·정지하고, 국세·지방세를 경매절차 등으로 징수할 때 해당 임대인의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퇴거위기에 놓인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법은 경·공매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부여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제정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경매 및 공매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긴박한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법은 등록재산 공개의무자는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신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장에게 가상자산 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법에 의하면 국가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제한 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국회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개정법에 따라 이해충돌여부를 검토해 7월 31일까지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마경기의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불법 온라인 사설경마 이용자를 흡수·유인하기 위해 ‘전자마권’ 발매를 도입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법은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마사회는 매년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 운영,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장관은 마사회가 이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자마권 발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존의 마권은 만 19세 이상인 성년이면 구매 가능하지만, 전자마권은 만 21세 이상이어야 구매할 수 있다. 부칙에 따라 마사회는 장관에게 시범운영계획을 승인받으면 법 시행 전에 전자마권 발매를 시범운영 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과 달리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이른바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록,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등을 규정했다.

제정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시설 등의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지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자가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관은 그 부족분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또한 제정법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통해 장관이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전력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각각 폐지하고 두 법률의 내용을 통합한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소속으로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 장관 등 18명의 당연직 위원과 21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계획을 종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 발전정책 지원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법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설했다. 수도권 이 아닌 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접경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창업 초기부터 중기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은 기업가치를 선정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의 기업이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으로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러한 계약 체결시, 융자총액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율 이내로 자금을 융자한 기관에 대해 신주배정을 약정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법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차입을 할 수 있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투자목적회사의 차입한도나 재산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피해입목의 제거 등 긴급히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방법으로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산

불·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앞선 방법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요청할 수 있게 해 신속한 산림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중 70%는 국가가, 30%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30%를 분담하던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보상 재원 전액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분만의료기관의 분만포기현상 및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를 국가 및 지자체의 임무로 규정하고,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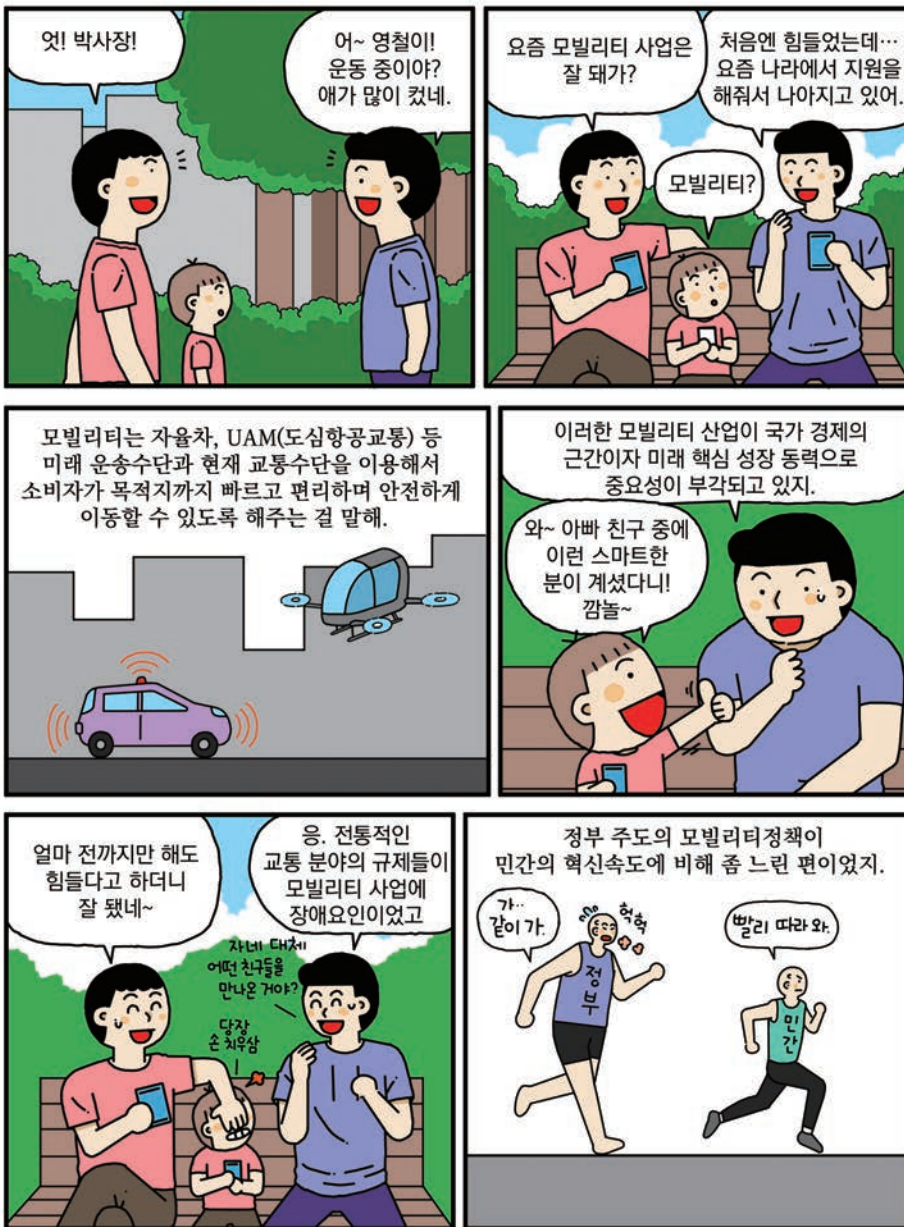
또한, 개정법은 지자체장이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영유아에게 실시한 선별검사 결과 장애가 의심돼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때 국가와 지자체가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사 결과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장애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합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위원회 2023-02-15 의결
본회의 2023-03-30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인공지능의 르네상스가 왔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태동하고 한동안 빙하기 같은 시기를 거쳤지만 최근에는 봇물 터지듯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제 막 원시인류를 넘어선 지능을 구현했을 뿐인데, 어찌 보면 과도한 관심일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은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사회적 현상은 2차 빙하기처럼 갑자기 찾아와서 새로운 과학적 진보가 나타날 때까지 다시 무심한 시간을 보낼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은 바둑도 두고 체스도 두지만, 승리의 기쁨도 모르고 교육적인 측면으로 일부러 저주지도 못한다. 이러한 인간적인 다양성이나 모호함 등, 궁극적 인간성을 갖추기까지는 몇 차례 더 길고 긴 터널을 지나야 한다. 그 래도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한다는 공포는 떨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으로도 첨단기술과 최하층의 기술을 제외한 중간적인 기술을 가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쉽게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첨단기술과 최하층의 기술에 종사하는 인력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대체해 봐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보고서를 쓰거나 반복적인 사무 업무를 하는 사무실 근로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몇몇 글로벌 회사들이 시범적으로 상당수의 자사인력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사람들의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뉴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누리엘 루비니는 최근 저서 ‘초거대 위협’(2023)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례를 꼬집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로봇이 대체 노동인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해외에서 이주해 온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지의 기존 주민들과의 경쟁은 물론이고 인공지능이라는 알고리즘과도 경쟁해야 해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겨났다는 주장이



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에 설치한 보이는 장벽과는 대조를 이루는 현상이다.

현재까지의 인공지능 수준으로도 그것이 로봇과 결합하면서 일반 대중들도 쉽게 체감할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식당에 가면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나르거나 음식값을 계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동화된 공장에서도 볼 수 있었던 로봇의 화려한 외출이 시작된 것이다. 음식점 주인의 입장에서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은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아프면 쉬어야 한다. 로봇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음식만 먹고 돈을 내지 않고 사라지는 소위 ‘먹튀’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손님의 입장에서서는 자리마다 설치된 작은 모니터를 통해 주문을 하고 비용도 바로 계산하면 된다. 처음에는 거리감이 좀 있지만 금방 익숙해진다. 사람이 서 있던 자리에 서빙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다. 사라진 일자리는 줄어든 일자리다. 변화하는 세상에는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해결책이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에 분당의 다리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해서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조사해 보니 다리의 구조가 보행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30년간 다리의 안전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들은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눈으로 휘어진 난간을 보면서도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크게 대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최신 기술을 장착한 특수한 장비를 가지고 재해석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인공지능이 설계한 다리는 다리를 건너는 차량이나 사람이 모두 동일한 안전 수준을 가지도록 설계할 것이다. 그러한 설계를 하는 데 시간과 비용은 오히려 더 적게 든다. 그리고 다리의 건설은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건설사가 아닌 대형 3D프린터가 담당한다. 실제로 2021년 네덜란드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리를 건설한 사례도 있으니 말이다. 심지어 준공식 테이프도 로봇이 잘랐다고 한다. 조만간 진화된 인공지능은 설계도 없이도 다리를 건설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인공지능이 프로그램으로만 존재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빠른 속도로 다방면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르네상스가 진행 중이다. 🍷



글 김동철 공학박사

의경에서 경찰관으로 바뀐 국회경비대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최우선 목표”



이임걸 국회경비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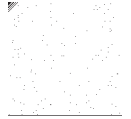
Q. 국회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2023년 2월 그간 국회 시설 경비를 책임져왔던 105의무경찰대가 해단되고 경찰관으로 구성된 국회기동대가 새롭게 창설됐습니다. 변화의 시기, 창설 기동대의 빠른 적응을 도모하고 최적화된 근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는데요. 저의 경호·경비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했던 업무 경험과 일선 경찰서장, 경찰특공대장 등을 역임하며 지휘관으로 근무했던 리더

십을 바탕으로 국회경비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경비대장 직위에 지원을 했고 올해 2월부터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새롭게 바뀐 경비대는 이전 경비대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경비 인력이 의경에서 경찰관으로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기존 의경 대원



들도 국회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기간 내내 성실히 근무해 왔지만 경찰관으로 전환되면서 좀 더 전문적인 국회 경비가 가능해졌습니다.

경찰관들은 법률 지식 및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으며 재직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기본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경내 근무 중 기습시위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의경 대원들의 경우 반드시 지휘요원들의 지침을 받고 움직여야 했던 반면 경찰관들은 상황이 급박할 경우 현장근무자가 독자적인 판단하에 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근무에 대한 패러다임 역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고정적으로 수행하던 근무지 일부를 신속 대응팀(차량 근무자)으로 전환해 기동성을 확보하고 상시 작전 장비를 탑재, 다양한 경내 상황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비대 직원 모두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국회경비대에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인가요. 힘든 점과 보람 있는 점도 궁금합니다.

A. 국회기동대 발대식에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신 일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축사를 통해 경비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신 덕분에 직원들 모두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보람 있는 점이라면 경찰관으로서 민의의 전당인 국

회에서 근무한다는 것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한가지 떠올리자면 3월 의회경호담당관실에서 주관한 국회경호 실무 심화과정 교육에서 국회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꼽고 싶습니다. 당시 주제는 국회테러대응체계 관련이었는데 평소 관심이 많은 분야인 이유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국회사무처와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등 상호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임했던 터라 보람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국회라는 근무지 특성상 항상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감을 갖고 근무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경비대 직원 모두 상시 교육훈련으로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포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A. 경비대 내에서는 안티드론, 경찰 물리력 대응 연구 등 다양한 학습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이 기본 업무도 충실히 하면서 이러한 자기개발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유능한 경찰관으로 성장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발전하는 국회경비대가 되도록 직원들의 활동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경비대 인력이 새롭게 개편된 이후 큰 변수 없이 안정적으로 기틀이 잡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회 직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비대는 앞으로도 총력을 다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글 고영선 사진 김진원

디지털 폭식 사회

기술은 어떻게 우리 사회를 잠식하는가?

지난 3년간 우리 사회를 넘어 지구의 모든 이슈를 지배하던 코로나19가 끝나가지만, 사회는 여전히 뒤숭숭하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집행된 정책들을 되돌리는 와중에 먹고사는 문제부터 세계 경제까지 온통 지뢰밭이다.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문제들이 갑자기 터져버려 매일 아침 뉴스를 보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최근의 미국 SVB(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를 보면서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넘어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됐다. 대중의 손가락 몇 번의 클릭이 미국 내 자산 기준 16위 규모의 은행을 파산시킨 속도는 디지털이 주는 위력을 새삼 깨닫게 됐다.

스티브 잡스께서 가라사대, “아이폰이 있으라.”(And Then Steve Said, “Let There Be an iPhone.”)

20세기 말 인터넷이 대중화된 이후 등장한 ‘스마트폰’은 우리를 언제나 연결하고 있다. 그 편리함은 코로나19에서 더욱 빛났다. 서로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상시 서로를 연결하며 연대의 위로를 건넸고 각종 플랫폼은 우리의 사회경제적 일상 활동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들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축복이었지만, 축제가 끝나고 나면 언제나 쓰레기가 남듯이 축복이 지나간 자리에는 저주에 가까운 단절, 소외, 폭력, 상대적인 빈곤 또한 창궐하고 있다. 이 책은 ‘기술 폭식 사회’의 기술만능주의와 그 기술의 독성과 폭력성, 그리고 디지



지은이 이광석
출판사 인물과사상사
출판일 2022. 11.



털 권력인 플랫폼에 지배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에 경고하고자 집필됐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기술 폭식 사회’론의 폭식의 근거를 동의해야 저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저자가 주장하는 폭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폭식은 채워도 쉽사리 포만감을 얻을 수 없다. 둘째, 폭식은 자기 조절의 한계를 넘는 행위다. 셋째, 폭식이 체내에 독소를 남기듯 신기술은 때로 이롭기도 하지만 자연-사회 생태에 기술 ‘독성’의 상흔을 남긴다. 마지막으로, 폭식은 먹는 것이 목적이 되면 어떤 내용물을 목구멍으로 넘기는지 스스로 사태를 파악하지 않게 된다.

저자의 주장대로 우리 사회는 기술 폭식 사회인가? 벚꽃이 흩날리는 길에는 스마트폰에만 얼굴을 파묻고 있는 ‘스몐비’(스마트폰과 줌비의 합성어)들이 걷고 있고, 버스는 ‘버스몐비’(버스와 스피커의 합성어)를 싣고 달린다. 세월이 주는 봄날의 따스함과 봄꽃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대신에, 스마트폰 너머 누군가의 디지털로 박제된 경험에 욕망을 충족시키다 못해 탐닉하고 있다.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지만 소외되어 있고, 소통을 위한 도구에 의해서 더욱더 편향되어 불통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 맞춤형 알고리즘이 추천한 콘텐츠만 편식한 사람들은 주말마다 외로움에 광장으로 나가지만, 그 광장에서도 각자의 주장만 외칠 뿐 공감과 연

대는 여전히 스마트폰 속에서만 찾고 있다.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대국에서 보여준 인간을 넘어서는 능력에 우리가 감탄하는 동안, 챗GPT란 놈이 새로 나타나서 그 전지전능함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 인공지능의 무한한 능력은 공포를 넘어서 이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에 느끼는 연대와 포용을 인공지능 ‘스몐비’에게 배풀까?

이 책은 디지털 기술로 도배된 우리 사회의 거대한 기술적·사회적 흐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메타버스와 소셜미디어, 인공지능과 노동의 미래, 디지털 기술을 통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사회, 생태적 위기, 그리고 기술 민주주의까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열성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 책 속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크고 웅장해서 도리어 뒹뒹거리는 것 같다. 특히 후반부의 ‘한국형 뉴딜’과 ‘생태주의’에 대한 저자의 글 속에서 저자의 열정이 너무나도 뜨겁게 느껴져 도리어 나의 마음이 한발짝 뒤로 물러서는 느낌을 받았다. 다소 공허할 수 있는 거대한 담론에서 시작하는 대신에 개인들의 디지털 폭식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로 출발해서 점차 저자가 하고 싶은 큰 이야기를 했다면 그 울림이 책을 읽고 난 후 나의 가슴속에 더 남아 있지 않았을까 싶다. 🍵

글 지용구(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조선의 대표적 인문지리서 ‘택리지(擇里志)’



조선 후기 실학자 청담(淸潭)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은 실학의 대종(大宗) 성호 이익의 재종손(再從孫)으로 성호학으로 학문을 익힌 학자였다. 그의 저서 ‘택리지’는 조선의 대표적인 지리서로 흔히 말해지는 바와 같이 인문지리서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저서임이 분명하다. 1751년 60세가 넘는 노학자 이중환에 의해 완성된 책이다. 이중환은 여주이씨로 참판 이진휴(李震休)의 아들로 태어나 성호에게 실사구시 학문을 배우고 1713년 23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김천도찰방·병조정랑·부사과 등의 벼슬을 지냈으나 당쟁에 휘말려 귀양살이를 했다. 유배지에서 풀려난 뒤부터는 벼슬은 버리고 전국 각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의 교통, 문화, 인물, 특산물 등을 정리해 ‘택리지’를 저술했다. 팔역지(八域志), 팔역가거지, 동국산수록, 동국총화록, 형가승람, 팔도비밀지지 등의 여러 이름으로 알려졌으나, 택리지가 책의 대표적인 이름이다.

책의 내용을 보자. 1753년에 정언유(鄭彦儒)의 서문이 있고, 사민총론(四民總論), 팔도총론(八道總論)(평안도·함경도·황해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충청도·경기도), 북거총론(卜居總論: 地理·生利·人心·山水), 충

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민총론에서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유래와 사대부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사대부로서의 행실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예법을 지키기 위한 여유 있는 생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니, 얼마나 실사구시적인 논리인가. 그래서 살만한 곳, 가거지(可居之地), 전답이 많고 물이 풍부해 농업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을 가거지로 여겼던 것이다. 팔도총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세와 위치를 설명하고 팔도의 위치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여 역사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사민총론에서처럼 팔도총론에서도 사대부의 기원과 역사적 변천을 언급하여 인문지리의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도별로 서술한 지지에서는 도 전체의 위치와 자연을 서술한 뒤 간략하게 자연환경, 인물과 풍속 등을 전체적으로 언급하고 옛날의 어떤 나라에 소속된 지역인가를 밝혀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논하고 있다. 즉, 경상도는 변한·진한의 땅이고, 함경·평안·황해도는 고조선·고구려의 땅이고, 강원도는 예맥의 땅임을 밝히고 있다. 고조선과 삼한,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건국, 고려의



건국과 경역에 관해서도 간략한 설명을 가했다. 요컨대 8도의 지역과 경계, 역사와 유례를 설명해 지리서로서의 내용을 풍부하게 갖춘 책이다. 본디 ‘여지승람’으로 대표되는 중전의 지리서는 군현별로 쓰여진 백과사전식 지리서였으나, 택리지는 우리나라를 총체적으로 다룬 팔도총론, 도별지지, 그리고 주제별로 다룬 인문지리적 접근을 갖춘 새로운 지리서로 저술된 특징이 있음을 알게 해준다.

택리지에 대한 고전적 가치를 논한 선학들이 많았는데, 특히 위당 정인보는 ‘조선고서해제’라는 내용의 저술에서 택리지에 대한 참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해주고 있다. “청담의 택리지는 중국 사마천의 화식전(貨殖傳)에 비교하여 박종(博綜)이 지나고 수경주(水經注)에 비교하여도 상실(翔實)함이 낫다. 조선의 지리서로서 고급에 이보다 나은 양서(良書)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비교할 수는 있으나 김정호의 지(志)는 수학적이나 청담(이중환)의 택리지는 철학적이다……”라고 말하여 조선 제일의 지리서임을 분명히 밝혔다. 더구나 위당은 청담의 택리지에는 중국만 존중하는 풍토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국토나 산천이 중국에 낫지 않음을 강조해 민족자아 발견에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지리학자 노도양 교수는 택리지를 민족고전으로 선택해 상세한 해제를 하였는데, 노 교수의 결론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지리학 견지에서 사구(砂丘: 황해도 연안지방), 용암(熔岩), 조수(潮水) 등을 관찰했다는 점, 둘째, 자신의 경험에서 강원도 지방의 남벌(濫伐)과 관련돼 한강 하상(河床)이 높아짐을 염려하였던 점, 셋째, 중국 산둥성에서 어민이 내침하여 평화선 설치 같은 것을 예언한 점, 넷째, 국방의 견지에서 황해도 자비령과 극성(棘城)까지의 축성을 말한 점, 다

섯째, 우리나라의 대마도 정책은 한일관계에서 체면을 잃기 쉽다는 등 오늘에 읽어도 공감할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은 참으로 위대한 학문이었다. 성호의 실학사상에서 학문을 익힌 이중환,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양식의 지리서를 저술한 점은 역시 실학사상이 이룩해 준 위대한 유산임을 잊을 수 없다. 위당 정인보가 말한 바, 철학적 지리서였기 때문에 택리지에는 당시 조선의 가장 큰 병폐의 하나였던 당파싸움이나 당쟁에 대한 아픈 경험으로 살만한 곳도 자기 당파가 많이 사는 곳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참으로 비통한 이야기를 했던 점으로 보면, 이중환은 당쟁의 종식과 당파싸움의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 민족적 과업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음도 알게 해준다. 당쟁의 비통한 아픔 속에서 성호 집안은 참으로 많은 탄압을 받았고 엄청난 피해로 가문이 망하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런 집안에서 자라 자신도 귀양살이라는 모진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지리서 내용에도 당파싸움의 해독을 자세히 언급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단순한 국토지리에 대한 책이 아닌 국토지리에 대한 철학적인 지리서, 택리지를 읽고서 오늘도 끊임없이 전개되는 정쟁과 당파싸움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안전한 국민 생활이 보장될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어떨 것인가. 학자요 문장가요 관인이었던 이중환, 270년 이전에 그만한 인문지리서를 저술한 점으로 보면 그는 역시 탁월한 선각자요 위인이었다. 19세기 말 이미 중국에서도 ‘조선지리소지(朝鮮地理小志)’, 일본에서도 ‘조선팔역지(朝鮮八域誌)’로 간행되어 모두가 읽고 있다. 많은 번역본이 나와 있으니 한번 읽기를 권해 마지않는다. 🍵

글 박석무(다산학자, 우석대 석좌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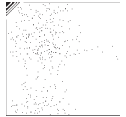
※국회 미술관은 국회에 전시된 미술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140년의 시간을 연결하는 한 컷의 이미지



조덕현, '최초의 외교사절', 200×120cm, 캔버스에 연필과 공예, 2013

작품 속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민영익, 홍영식이며, 뒷줄 가운데 외국인이 보빙사의 미국행을 안내한 참찬관 퍼시벌 로웰이다.



이 작품은 국회 개원 5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미술작품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갈무리하는 사업에 화가로서 참여한 조덕현은 ‘제헌국회 개원 및 건국헌법 공포’라는 작품을 그렸다. 흑백의 기록 사진을 토대로 한 이 그림은 역사적 사실을 주관적 관점이 아닌 객관적 관점으로 그려냈다. 이번에 소개하는 작품 ‘최초의 외교 사절’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캔버스에 콩테와 연필로 그린 이 작품은 뜨거운 감정보다는 담담한 이성으로 풀어낸 그림이다. 어떠한 격정적이고 웅변적인 사건을 담아내지 않은 이 그림은 역설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멈추어있는 과거의 순간을 현재의 순간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사유의 장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사진’ 재현

이 작품의 가치는 1883년의 역사적 사건을 2023년이라는 현재의 시공간에 투척한다는 데 있다. 그것은 한 장의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과거를 현재로 소환해 내는’ 이미지 소통의 전형을 보여준다. 국회의 주문을 받은 조덕현은 역사화 특유의 격정적이고 장대한 스케일을 회피하고 담담하게 사진 재현이라는 방법을 채택했다. 그는 역사화의 일반적인 어법을 따르지 않았다. 일반적인 역사화는 주제를 둘러싼 인물들을 최대한 많이 등장시켜 군중 속의 영웅을 만들어낸다. 또한 많은 사건을 조합하여 역사적 서사를 한 화면 안에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최대한의 서사성을 창출하려고 한다. 그러나 조덕현이 받아든 주제를 풀어내는 방식은 사진 한 장에 담긴 역사적 순간을 최대한 사진답게 보이도록 재현한 것이었다.

이 회화 작품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사진’을 재현한 것이므로 재현물의 재현이다. 근대기 사진술의 발명

이후, 화가들은 사진에 의존해 형상을 잡아내고 서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때 화가들은 사진을 토대로 한 이미지에 사진의 흔적을 지우고자 회화적 장치들을 담아놓곤 한다. 때로는 두터운 물감 덩어리를 바르기도 하고, 거친 붓질로 화가의 손길 흔적을 남겨놓기도 한다. 그것이 사진과 분별하는 그림 고유의 맛과 멋이기 때문에, 화가들은 그림다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정성을 들인다. 조덕현은 그 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어떻게 하면 사진처럼 보일까를 궁리해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긴 사실적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현직 회화와 교수로 재직 중인 중진 화가 조덕현은 회화를 중심으로 설치 작업을 풀어나가는 다매체 예술가다. 거대한 규모와 다양한 매체를 구사하는 역량을 갖춘 이 작가는 그러나 때로는 매우 절제된 언어로 단정하고 차분한 결과물을 도출해내기도 한다. 이런 작업들은 주로 사진을 정밀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작은 사진 한 장을 200호, 300호 짜리 거대한 회화 작품으로 옮겨내는 일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작업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작품들은 흑백의 단색으로 이뤄지는 만큼 그 안에 형상과 형상 사이의 차별을 위해 엄청난 깊이를 주어야 한다는 난제를 안고 있다. 흑백의 회화이지만, 그 속에 색감을 담아 풍요로움을 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먹 하나로 화면을 다스려야 하는 수묵화와도 같이 깊이 있는 흑백의 색감을 표현해야 한다.

13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사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전달하는 이 그림은 사진을 보는 것보다 더 사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 사진의 사실적 느낌은 과거 속에 박제된 이미지이면서 동시에 현실 속에 주어진 또 하나의 사실로서 존재한다. 사진이라는 기계적 재현 이미지는 근대의 산물이다. 사진 이미지는 조선시대라



의원회관 복도에 전시된 '최초의 외교사절'

는 봉건시대가 지나고 일제의 영향을 받은 근대 이후의 이미지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말기의 실제 인물들을 사진 이미지로 접하는 것은 낯선 일이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선비, 관료들의 이미지를 생생한 사진적 재현 이미지로 접하도록 함으로써 역설적인 생생함을 제시한다. 게다가 미국의 고위 관료들을 함께 배치해 이중적인 낯설을 연출하고 있다.

1883년 조선은 미국에 외교 사절단으로 보빙사(報聘使)를 파견했다. 한미 양국 역사에서 최초로 이뤄진 조선의 외교사절단으로 파견된 민영익 일행은 유럽대륙을 거쳐 귀국했다. 미국이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당시 국제 정세 상 상호간 호감을 얻을 필요성 때문이었다. 고종은 임오군란 이후 중국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조선의 실질적 자주독립과 부국강병을 준비하고 있던 터에 미국의 도움으로 근대적 개화를 이루려는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었다. 미국을 방패삼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였다. 새로 외교관계를 튼 조선이라는 나라의 사절단을 맞이해 미국은 최선의 환대를 했다. 조선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 향후 동북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고자 했던 의도였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걸쳐 사대외교를 해온 조선

은 동북아시아의 제국주의 질서가 흔들리며 새로운 국제 질서가 들어서는 시기에 국체를 지키며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최초의 외교사절단인 보빙사의 미국 방문은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조선의 입장에서 기대했던 군사, 외교 분야에서서는 큰 성과가 없었다. 미국은 무역과 선교에 관심을 가졌고, 군사 외교 분야에는 정치 불개입 입장을 지녔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국은 상호 간 원만한 친선을 도모하며 무역의 길을 넓혔다. 농기구와 무기, 전기 등의 근대문물이 들어온 것이 보빙사 파견 이후의 일이다. 이듬해인 1884년에 벌어진 갑신정변으로 인해 중국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이 더 심해졌기에 미국과의 친선외교가 더 굳게 이어지기는 어려웠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며 밀어내려고 했다.

역사를 반추하는 서사적 소통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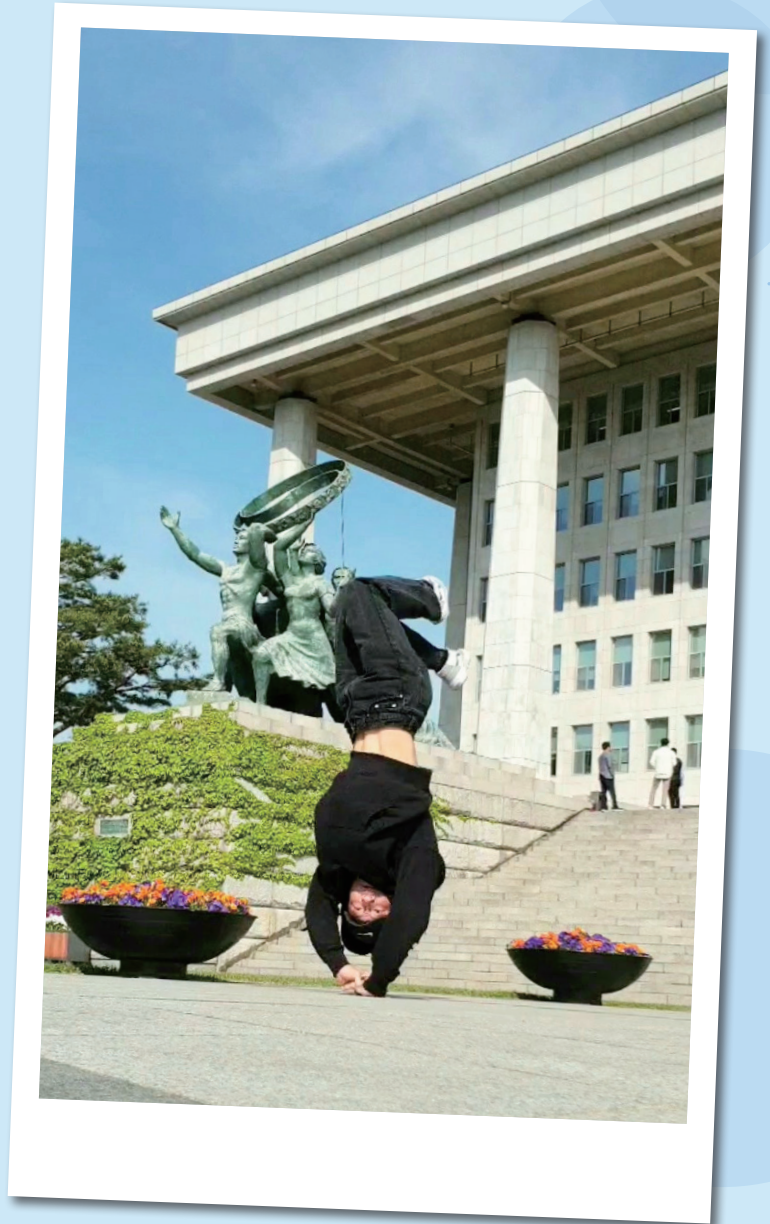
흑백으로 재현한 사진 이미지의 테두리는 화려한 금박의 서양식 액자다. 차분한 단색 톤의 이미지와 화려한 금박 액자의 극단적인 대비는 담담한 사진 이미지를 평범한 한 장의 사진이 아닌 곱곰이 되새겨보아야 하는 회화 작품으로 틀 지우는 역할을 한다. 황금색 액자 속의 사진 이미지 한 장은 역사를 반추하는 예술 작품의 서사적 소통 능력을 발현한다. 보빙사의 미국 방문으로 조선과 미국이 호의적 이미지 구축에 성공한 것은 향후 한반도에서 벌어질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의 단초를 제공한 다. 조선시대 말 최초의 외교사절 파견 이후 14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 작품 '최초의 외교사절'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 20세기 역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2023년 현실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온다. 🍵

글 김준기(미술평론가·광주시립미술관장)

국회 본관 앞에서 ‘투틴’ 발사

올림픽 정식종목인 ‘브레이킹’에서
태극 마크를 드높였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투틴(두 손을 잡고 회전하는 기술)’을
시도해보았습니다.

현창환(경기도 김포시)



에너지 절약은 모두 다함께!

에너지(energy)라는 말은 인간이 활동하는 물리적·심리적 힘을 표현할 때도 쓰고 물, 석탄, 석유 등과 같은 동력 자원을 나타낼 때도 쓴다. 국회회의록시스템에서 제헌국회부터 제21대국회까지 ‘에너지’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9천900건이 넘게 나온다. 그러면 동력 자원을 뜻하는 ‘에너지’라는 표현은 언제 처음 회의록에 등장했을까? 1957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립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협약에 관한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에너지’라는 말이 회의록에 표현되었다.

제3대국회 제25회 제13차 본회의(1957.6.17.)

2. 국제원자력기구협약에 관한 동의안

○외무위원장대리 정일형 (……) 우리 인류들의 파괴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 인류들의 생활을 향상 발전시키는 평화 전용을 해 보자고 폭탄적인 선언을 했고 이 선언에 의해서 소위 국제원자력기구를 설치하게 되었고 또한 그 협약을 체결했던 것이올시다. 이제 이 국제원자력기구, 영어로 하면 이것을 인터내셔널 에토믹 에너지 어젠씨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제5대국회부터 제11대국회까지 동력 자원을 뜻하는 ‘에너지’라는 말은 에너지 공급, 에너지 정책, 에너지 파동, 에너지 절약 등으로 표현되면서 그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재미있는 사례로 제11대국회 제108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에는

에너지 절약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아침 TV방영을 재고해 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2차 석유파동 대응으로 에너지 절약을 강조한 내용이다.

제11대국회 제108회 제1차 본회의(1981.9.22.)

서면질문서¹⁾

제출연월일 : 1981. 8. 21.

제출자 : 김형래 의원 외 20인

질문대상자 : 국무총리 및 내무 재무·문교 문공·건설부장관

질문배경

제107회 임시국회가 끝난 이후 국회가 장기 휴면에 들어감으로써 궁극한 국정 현안 몇 가지를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

5. 아침 TV방영 관계

하루 4시간씩 실시하는 아침 TV방영은 당초 목적과는 크게 벗어나 낭비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예로 한전의 집계를 보면(흑백TV 660만 대, 컬러TV 100만 대 중 약 50%가 시청한다고 볼 때) 매시간 20만kW의 전력을 소모하며 이것을 하루 4시간으로 치면 80만kW의 전기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유가압박으로 경기가 크게 위축된 판에 이것은 지나친 낭비가 아닌가.

모두가 산업역군으로 일터에 나가야 할 판에 일하는 자는 누구이며 안방에서 TV나 보는 자는 누구인가? 에너지 절약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아침 TV방영은 재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는 제13대국회 이전까지는 회의록 본문 끝에 게재되어 있고, 제13대국회 이후부터는 회의록 부록으로 보존되어 있다.



매년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이다.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최고 전력 소비를 기록했고 이날을 계기로 에너지의 중요성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했고, ‘에너지의 날’에는 전국 동시 소등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2005년 치솟는 유가로 인해 전력요금이 급격히 오르자 국회에서도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 중 소등 상태에서 촛불을 켜고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제17대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2005.9.27.)

○위원장 김용갑 오늘 한전 감사를 하면서 한번 소등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한지를 체험했으면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히 단전가정의 경우 전기료를 못 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단전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국정감사를 하면서 소등을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일단은 불을 끄고 초를 갖다 주세요. 소등을 하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위원님들께서 직접 체험하셨겠지만 전기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국민에게는 공기와 같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도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함을 저희들도 체험을 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부족·에너지 고갈 문제는 에너지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 전 부처의 역량을 모으고 있고, 국회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난방비 폭탄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가스 가격 상승이 그 한 원인이다.

제21대국회 제403회 제3차 본회의(2023.2.7.)

○서영교 의원 (……) 난방비 폭탄의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고지서가 딱 몇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글썄요, 모든 세대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한 30% 이상 오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균입니다.

○서영교 의원 그래서 더 잘 보십시오. 고지서는 딱 2배 나오고 있습니다. 난방비 고지서는 2배 나오구요. 전기료도 폭탄입니다. 전기료는 얼마나 더 나오고 있을까요?

○국무총리 한덕수 글썄요, 최근에 전깃값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정도면 평균 전기를 쓰고 있는 그러한 세대는 약 1만 삼사천 원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춘식 의원 난방비 폭탄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리께서는?

○국무총리 한덕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수급 사정이 어려워졌고 특히 구라파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로부터의 파이프라인, 가스가 제대로 공급이 안됨에 따라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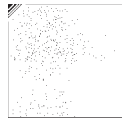
현대 사회에서 전기와 가스는 의식주와 같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활동에도 꼭 필요한 것들이다.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국회에서도 관련된 정책 마련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이 때에 오늘날부터 한 가지씩 수도물 절약, 여름철·겨울철 실내온도 적정선 유지, 불필요한 조명 끄기, 생활용품 재활용, 저층 걸어가기,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 🍵

글 오근순 속기사무관(의사국 의정기록2과)

제주의 신비를 품은 오름의 여왕

다랑쉬오름





다랑쉬오름에서는 멀리 성산일출봉도 보인다.

‘오름의 왕국’ 제주에는 무려 386개나 되는 오름이 있다. 오름이란, 우리말 ‘오르다’에서 파생된 말이다. ‘봉우리’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제주의 오름은 그냥 봉우리와 달리 신비롭고 특별하다. 제주 설화에 의하면 설문대할망이 제주도 한가운데에 한라산을 높이 쌓으려고 치마로 육지의 흙을 퍼담았는데, 치마폭 사이에서 땅으로 떨어진 부스러기 흙덩이가 오름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제주의 오름들은 오래전에는 한라산의 기생화산 정도로 여겨져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요즘엔 대접이 달라졌다. 오름 하나하나가 곧 작은 화산이라고 여겨지면서 인기 만발이다. 얼핏 나지막한 봉우리처럼 보이지만, 그 품에는 저마다 커다란 우주의 신비를 품고 있다. 말굽형, 원추형, 원형, 복합형 등 모양도 다양하고, 분화구 안에는 초지가 무성하다. 습지는 물론 호수도 품는다. 제주 여행의 완성은 오름 산행이라는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저마다 특별한 매력을 품고 있는 제주의 많은 오름 중 ‘오름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름이 있다. 이름부터가 참 예쁘고 양증맞은 ‘다랑쉬오름’이다. ‘다랑쉬’는 제주 방언으로 달을 뜻한다. 오름 정상의 분화구가 쟁반처럼 둥글게 파여 마치 달처럼 보인다고 해서, 또 오름 위로 뜨는 달의 모습이 무척 아름답다고 해서 예쁜 이름이 붙여졌다.

괜히 오름의 여왕으로 불리는 게 아니다. 다랑쉬오름은 제주도에 있는 오름 중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오름으로 통한다. 높이 382m의 큰 오름으로 커다란 분화구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오름의 모양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미를 자랑한다. 그 자태가 참으로 아름다우면서도 위엄이 있어 오름의 여왕이 됐다.

백록담 버금가는 분화구, 제주 최고의 '풍경맛집'

다랑쉬오름 산행의 들머리는 오름 동쪽에 위치한 탐방안내소다.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천천히 올라가도 30분 정도면 정상에 다다를 수 있어 힘들지 않다. 분화구 둘레를 탐방하며 전체 코스를 다 돌면 3.4km,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등산로 초입에는 삼나무, 편백 등 키 높은 나무들이 빼곡하다. 피톤치드 내음을 맡으며 숲을 걷노라면 어느새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이어진 본격 탐방로는 지그재그 동선으로 이뤄져 있다. 예전에는 정상인 굽부리(분화구)까지 급경사를 바로 오르도록 등산로가 뻗어 있어 산행이 어려웠다. 요즘엔 등산로를 정비해 비탈에 지그재그로 계단을 만들어서 훨씬 오르기 쉬워졌다. 미끄러질 걱정 없이 천천히 오르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기에 좋다. 다랑쉬오름은 제주 최고의 풍경맛집 중 하나다. 주변에서 가장 높아 정상에 서면 일대의 풍경이 막힘없고, 장쾌해 절경을 자랑한다.

천천히 계단을 따라 오르다 보면 고도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시야도 차츰 넓어진다. 서두르지 말고 쉬엄쉬엄, 그리고 중간중간 멈춰서 뒤를 돌아보면 절로 감탄사가 터져 나온다. 아래에서 보았던 것과는 또 다른 세상의 풍경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중턱에 이르면 이쯤에서 쉬어가라고 벤치 하나가 품을 내준다.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른 후 아래로 시선을 돌리면 다랑쉬에 흑성처럼 딸린 아끈다랑쉬오름의 정수리가 인상적이다. '아끈'은 제주 방언으로 '버금' 또



삼나무, 편백나무 빼곡한 오름 입구

는 '돌쩌'라는 뜻, 영락없는 다랑쉬오름의 축소판이다. 모양은 타원형으로 우주선처럼 생겨 신비로움마저 든다.

한 걸음 더 오르면 주변의 푸른 밭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 더 오르면 이웃한 용눈이오름이 한 폭의 풍경화다. 조금 더 오르면 바닷가에 거의 붙어있는 지미오름, 성산일출봉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정상 가까이에서는 멀리 우도까지, 바다와 어우러진 제주 동쪽 끝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정상에 서면 시야가 터지면서 둥글게 파인 거대한 굽부리가 시선을 압도한다. 분화구의 둘레는 1,500m, 깊이는 115m로 한라산 백록담에 뒤지지 않는다. 분화구 주변으로는 둘레길이 놓여있다. 완만한 능선길을 따라 20여분 걷다 보면 저 멀리 동쪽으로 성산일출봉과 서쪽



아담하고 예쁜 아끈다랑쉬오름



한라산까지 사방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광을 만날 수 있다.

수풀 우거진 분화구 안에는 여기저기 돌탑이 쌓여 있어 궁금증을 유발한다. 돌탑에는 슬픈 사연이 숨어있다. 1992년 근처 다랑쉬굴에서 유골 11구가 발견됐는데, 조사 결과 4·3사건 때 토벌대가 굴 입구에 지른 불과 연기로 학살당한 다랑쉬 마을 사람들의 유골로 밝혀졌다.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마음에서 누군가 돌탑을 쌓았으리라. 다랑쉬오름은 그 아픈 역사를 보듬어 안고 위로를 전해준다.

다랑쉬의 축소판 아끈다랑쉬오름, 그리고 용눈이오름

다랑쉬오름에서 내려오면 맞은 편에 납작하게 누운 작은 오름이 보인다. 다랑쉬와 모습은 닮았는데 크기는 반도 안 된다. 위에서 내려다봤던 ‘아끈다랑쉬오름’이다. 전체적인 생김새와 등그렇게 패인 분화구가 다랑쉬의 축소판이다.

둘은 꼭 지구와 달의 관계처럼 친밀하다. 큰 다랑쉬에 올랐다면 작은 다랑쉬도 둘러보는 것이 산행의 완성이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서있는데, 아끈다랑쉬의 규모는 훨씬 작아서 걸어서 5~10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위에서 봤을 때 꼭 비행접시를 닮은 이 오름의 굽부리 안에는 드넓은 평원이 펼쳐진다. 분화구 모양은 마치 원형경기장을 연상케 한다. 위에서 내려다 볼 때의 아담함보다는 아득한 느낌이 들 정도의 드넓은 풍경이 인상적이다. 둘레 600m, 깊이 10m의 분화구 안은 억새 천지의 별판이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흔들리는 평화로운 풍경에 마음의 긴장도 슬며시 풀어진다.

아끈다랑쉬오름 주변에는 흰 보라빛 갯무꽃이 지천이다. 주로 남쪽 바다에서 자라는 갯무에서 피는 꽃으로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봄 야생화다. 갯무꽃은 4~5월에 피며 ‘바람 같은 삶’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다랑쉬오름에서 용눈이오름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갯무꽃 군락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곳에선 다랑쉬오름 위에서 봤던 용눈이오름도 지척이다. 걸어서 30분 거리다. 용눈이오름은 생김새가 용이 누워 있는 모양 같고, 오름 전체의 곡선이 부드러워 제주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오름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사진작가 김영갑이 가장 사랑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루게릭병으로 죽어가면서도 오랜 사진 작업을 통해 제주 오름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렸다.

용눈이오름은 최근 몇 년간 출입이 금지됐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니 정상부가 맨바닥을 드러내는 등 식생이 파괴되는 바람에 복원을 위한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뽕뽕 닫힌 문이 언제 다시 열릴까 기다리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다행히 최근 탐방로 정비로 마친 용눈이오름이 7월 전후로 개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반가움에 벌써 가슴이 뒹다. 🍵

글 | 사진 유인근(여행칼럼니스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는 810-2번을 이용해 다랑쉬오름 정류소에 내린 후 1.3km 걸어야 한다. 제주시버스터미널에서 211번을 타고 된다. 배차시간이 길어 한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제주시-1132번 일주도로-97번 번영로-1112번 비자림로-1136번 도로-다랑쉬오름, 입구에 주차장이 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우리말

세대 간의 갈등이야 어느 때인들 없었겠는가마는 요즘처럼 사회 문제로 불거진 경우는 흔치 않다. 나이 지긋한 사람이 젊은 사람의 행실을 보고 마뜩잖아 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을 대하는 태도나 말투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곤 한다. 다음에 예시하는 기사 세 편을 살펴보자.

가. A씨는 지난해 ○월 ○○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을 나무라던 과정에서 머리와 가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법원이 술 취한 미성년자를 꾸짖다 집단폭행당한 성인에 대해 미성년자들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 폭행을 유발한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다. ○○지법 형사1단독 ○○○ 부장판사는 흡연하는 청소년들을 야단치다 오히려 욕설을 듣자 화기에 흥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기사에서 다른 사건의 핵심은 어른이 청소년의 행동을 빌미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한 단어를 보면 (가)에서는 ‘나무라다’가 등장했고 (나)에서는 ‘꾸짖다’가 등장했으며, (다)에서는 ‘야단치다’가 등장했다. 모두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지만 꼼꼼하게 따져보면 어감의 차이가 있다. 어린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뜻을 가진 단어는 제법 많다. 위에서 보인 세 단어 외에도 탓하다, 타이르다, 꾸중하다, 혼내다 등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이 단어들은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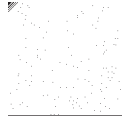
사람마다 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사전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어감

의 차이를 짐작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가)에서 사용한 ‘나무라다’는 ‘어떤 몸짓이나 말투를 밝혀서 알아듣도록 좀 가볍게 말하다’라는 뜻이다. 이럴 경우 가볍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람의 원인이 된 행위 역시 큰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나)에서 보이는 ‘꾸짖다’는 이보다 조금 무겁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을 낱알이 밝혀서 따끔하게 말하다’이다. 몸짓이나 말투 때문에 발생한 지적과 잘못을 밝혀서 따질 정도의 지적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다. 더욱이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끔하게 말하는 것이니, ‘꾸짖다’라는 단어의 무게는 ‘나무라다’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

(다)에서 보이는 ‘야단치다’는 (가)와 (나)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지는 단어다. ‘야단치다’의 사전적 의미는 ‘소리를 높여 호되게 꾸짖다’로 등재되어 있다. 가볍게 말하거나 따끔하게 말하는 것과는 달리, 호되게 꾸짖는 것이니 당연히 (나)보다 강한 질책의 뜻이 들어 있다. 세 단어 모두 어른이나 윗사람이 아이들이나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다. 따라서 주어가 아랫사람일 경우에는 “어른에게 꾸지람/야단을 들었다”는 방식으로 써야 한다. 이럴 때 사용한 꾸지람과 꾸중은 같은 의미다. 이 문장을 예들려서 표현할 때는 “어른에게 걱정을 들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말들이 오간다. 주고받는 말씨를 보면 사람의 격을 알 수 있다. 험한 말이 오갈수록 우리 사회가 팍팍하다는 뜻이리라. 좀 더 곱고 부드러운 말을 쓰는 노력을 기울일 때 사회가 조금이라도 아름답아지지 않을까. 🍵 글 김풍기(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국회 ART GALLERY 6월 작품전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N번째 기회

2023. 6. 1. - 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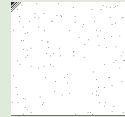
작가 : 오윤석 | 추천 : 권영세 의원실



하늘 노래, 차다

2023. 6. 16. - 6. 29.

작가 : 권영애 | 추천 : 이용호 의원실



쥘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국회연설, 박민식 국가보훈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등

5월 1일	• 김진표 국회의장, 미국 하원의원 방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 논의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에 송기현 의원, 원내대변인단에 김한규·이소영·홍성국 의원 선임
5월 3일	•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국회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길 바란다는 입장 밝혀
5월 7일	•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논의
5월 8일	• 김진표 국회의장, 카스트로 엘살바도르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
5월 10일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3개월의 징계처분 의결
5월 14일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거액 코인 투자 논란으로 자진 탈당
5월 15일	• 김영주 국회부의장, 8박 9일간 콜롬비아와 엘살바도르 공식 방문 • 정부, 전기·가스요금 약 5% 인상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에서 이틀간 '국회 MWC 2023' 개최
5월 16일	•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5월 17일	• 여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코인 보유 관련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를 논의 • 쥘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국회 연설 •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의결
5월 22일	• 정우택 국회부의장, 국회부의장 집무실에서 린캄 두앙사완 라오스·한 의원친선협회장과 양국 간의 경제·문화 교류 확대,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 정무위원회,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5월 23일	• 김진표 국회의장,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진영정치와 팬덤정치를 넘어 우리 정치를 능력 있는 민주주의로 바로 세우겠다"고 말해
5월 24일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 • 여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투자 논란과 관련해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게임업체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
5월 25일	• 국회, 본회의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의결

정리 윤성혜



찰칵! 국민이 담은 국회

국회방문객이 찍은 국회 사진 공모



- 주제** 국회의 풍경
- 참가자격** 국회를 방문한 사람 누구나
- 내용** 사진과 촬영이유, 사진설명
 - 국회의 풍경이나 국회를 찾은 방문객, 국회 실내 모습 등의 사진과 짧은 설명(2~3문장)
- 응모방법**
 - 휴대폰으로 촬영(촬영 날씨가 보이게)
 - 사진 및 설명, 연락처를 이메일로 제출 (book@assembly.go.kr)
- 마감** 매달 20일
- 규격** 가로·세로 3000픽셀 이상 용량의 JPG, JPEG 파일형식 원본 창작사진 (디지털 합성 등 수정 변형불가)
- 시상** 선정 시 원고료 10만 원
- 문의** 국회사무처 문화소통담당관실 (02-6788-2058)

- 매월 1편씩 선정하여 국회 월간지 국회보에 게재 예정.
- 응모작품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선정 이후라도 표절, 타 공모전 입상작품 등 이유로 저작권 문제 발생시 선정 취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발 간 등 록 번 호
31-9710176-000680-06